

간행물등록번호

11-1380000-000833-10

<http://www.maf.go.kr>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4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0187

등록일: 2005년 1월 17일

기증:

대한민국정부

목 차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	1
1. 목표 및 방향	3
2.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7
3.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1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5
1. 협동조합개혁	17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28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39
II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49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51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63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77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79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90
6. 친환경농업의 육성	99
7. 농어가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107
8.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130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33
1. 쌀산업 대책 추진	135
2. 채소·원예산업	141
3. 축 산 업	146
4. 임 업	160
5. 수 산 업	180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89
1. 기초생활환경 개선	191
2. 교육여건 개선	202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204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205

• I .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3
2.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7
3.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1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쌀 관세화 관련협상·DDA협상·FTA 확산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식품안전·건강(Well-Being)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져 고품질·안전농산물이 아니고는 경쟁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도·농간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조기퇴직 및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에 따라 농촌지역에 대한 전원·휴식공간으로서의 수요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도시근로자와 상응하는 농업인의 소득 실현

둘째,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의 농업 육성

셋째,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의 농촌 개발을 통한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균형발전사회'의 목표아래 2004년 2월,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농업·농촌 정책의 틀로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2004년 농정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경영상 위험요인을 줄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을 구축하며,

둘째, 농업경영체 육성, 친환경농업 확산, 농식품 안전성 관리, 농산물 유통혁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시장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셋째, 연금·의료보험료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농촌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실천을 위해 119조원을 확보하고 농업 투융자 시스템을 혁신하여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농정신뢰를 확보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경영컨설팅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전문가 및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제도화하는 등 농림사업 투융자 집행·평가체제를 개선하였다.

임업은 반세기에 걸쳐 추진해온 산림계획에 의거 성공적으로 녹화된 산림을 숲 가꾸기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난개발 방지 등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지구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숲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고, 21세기 선진 한국의 격에 걸맞은 국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녹화된 숲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를 위해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을 목표로 국가계획인 제4차 산림기본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임정·기술임정·참여임정을 통하여 숲다운 숲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림휴양 공간을 확충하며 산촌진흥에 노력하는 등 사람과 숲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4년도 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은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연근해 어선세력의 조속한 구조조정 마무리, 자율관리어업체제 조성 및 어업제도개편 등을 중점시책으로 정하여 어장축소와 자원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자율관리어업을 모든 어촌으로 확산하여 어업인 의식개혁과 “새어촌 운동”으로의 발전을 지원하며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 및 어초시설 개발·설치로 수산자원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자율관리체제에 적합하도록 어업제도의 개편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우선 어업허가를 일제 정비토록 하고 업종별 허가정수의 정비 및 유사업종의 통합과 조업구역·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정착으로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도록 한다.

둘째,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업종과 어업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2004년까지 근해어선 2,646척과 연안어선 629척을 감척하여 적정 어획량을 확보토록 하고 양식수산물의 적정생산을 위한 구조조정과 양식어장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셋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기한 불법 소형기저 단속실시, 불법어업 근원 제거, 생계형 어업자 전업 및 감척 지원 등의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도단속 체제 확립, 민간참여 확대 및 현행 수산업법 체계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지속적인 해양오염 퇴적물 준설과 침적폐기물 정화로 깨끗한 바다조성에 주력하며, 어장정화 규모의 확대와 양식수산물 질병관리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배합사료 공급율을 확대하여 자원남획과 어장오염을 방지하고 적조의 신속대응 등을 통하여 풍요로운 바다, 건강한 어업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다섯째, 어촌·어항·어족자원의 관광자원화로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우선 소규모 어촌·어항을 레저·휴식·관광의 다기능 생활공간으로 개발하고, 바다목장, 마을어장 등을 체험·생태형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섯째,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 도입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수산물의 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시장 기능에 따른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 비축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인공위성 영상 관독을 통한 강도 높은 양식어장 정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존할 수 있는 양식산업 관측제 및 유통협약제를 도입하고, 종합판매장 등 유통기반시설을 지속 확충, 선어회 소비 촉진을 통해 수산물 식문화 개선, 전자상거래 실시 등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곱째, 수산식품 안전성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인력·장비보강으로 통관검사 및 원산지표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식약청·시도와 합동점검체계 구축으로 생산·유통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한·중 수출입수산물위생 관리에 관한 약정』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중국산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에 증진하고자 한다.

여덟째, 부실심화로 정상적 기능수행이 곤란한 일선수협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지원 및 통폐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어업인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내외 어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수산세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홉째, WTO-DDA의 수산보조금 및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철폐에 대한 협상에 대비하여, “수산·어촌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수산보조금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수산업을 시장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해 나가하고자 한다.

2.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가. 농업농촌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2003년도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의한 투융자는 국고기준으로 6조 8,527억원이며,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8조 859억원이 집행되었다.

국고 투융자 실적 6조 8,527억원은 당초 2003년도 농업·농촌발전계획상의 6조 8,574억원보다 47억원 적은 수준이다.

지방비는 계획대비 84.3%인 6,441억원을 지원하였다. 지방비 집행액이 당초계획보다 감소한 것은 농업인교육 및 인력육성 분야,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 분야 등에서 지방비 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자부담 지원은 계획대비 128.7%인 5,8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농업인 자율사업에 서의 자부담 금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03년도 투융자 계획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계	계 획 (A)	집행실적(B)	대비 (B/A)
계		80,794	80,859	100.1
국 고		68,574	68,527	99.9
지 방 비		7,641	6,441	84.3
자 부 담		4,579	5,891	128.7

분야별로는 국고투융자 6조 8,527억원 중 영농기반정비, 농지정비 및 관리 등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확충 분야에 2조 6,361억원(38.5%), 부채대책, 농업인부담경감 등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분야에 1조 3,300억원(19.4%), 농업경영종합자금, 교육·훈련 등 농림업경영체 육성 분야에 1조 93억원(14.7%), 산지·소비지 유통시설확충 및 농림수산물 수출기반조성 등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분야에 8,209억원(12.0%),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에 7,248억원(10.6%), 기술개발, 정보화지원 등 농림업부가가치제고 분야에 3,316억원(4.8%)이 집행되었다.

<2003년도 국고투융자의 사업 분야별 내역>

(단위 : 억원)

	계획(A)	집행실적(B)	대비(B/A)	비중(%)
계	68,574	68,527	99.9	100.0
농림업 공익적기능확충	22,503	26,361	117.1	38.5
건설한농림업경영체육성	13,038	10,093	77.4	14.7
농림업부가가치제고	2,651	3,316	125.1	4.8
유통개혁및수출확대	13,520	8,209	60.7	12.0
지역개발과복지증진	11,353	7,248	63.8	10.6
농업인경영안정지원	5,509	13,300	241.4	19.4

사업주체별로는, 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농업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확충 및 농신보기금출연사업 등 정부직접사업 및 SOC사업과 축산업구조개선, 임업구조개선의 기금사업은 당초계획에 비해 증가한 반면, 농업기계화자금, 영농규모화사업, 농산물유통분야의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생산자단체 대상사업 및 업체지원은 감소하였다

(단위 : 억원)

	계획(A)	집행실적(B)	대비 (B/A)
계	68,574	68,527	99.9
- 보조	41,669	53,888	129.3
- 융자	26,905	14,639	54.4
- 농업인	17,062	17,393	101.9
- 생산자단체등	10,675	6,417	60.1
- 정부사업	13,035	15,085	115.7
- SOC사업	25,215	28,082	111.4
- 업체지원	2,587	1,550	59.9

국고지원 내역별로는,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통해 5조 4,269억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91.1%를 달성하였으며, 농지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 농업관련 기금에 의해 1조 4,258억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비 157.9% 달성하였다. 이는 서남해안 및 새만금간 척중합개발과 축산농가경영여건개선, 축협조합경영활성화지원 등의 계획변경에 의한 사업확대와 논농업직불제 시행 등에 따른 것이다.

(단위 : 억원)

	계획 (A)	집행실적(B)	대비 (B/A)
계	68,574	68,527	99.9
- 예산	59,544	54,269	91.1
- 기금	9,030	14,258	157.9

품목별로는, 국고집행액 6조 8,527억원 중 생산기반정비, 영농규모화, 농업기계화 등 쌀관련 분야에 3조 2,693억원으로 47.7%을 지원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농가경영여건개선 등 축산분야에 5,934억원(8.7%), 산림자원확충 등 임업분야에 3,993억원(5.8%), 원예·특작에 1,203억원(1.8%) 순으로 집행되었다. 당초계획에 비해 원예특작 부분에 대한 투융자 비중은 줄어든 반면, 쌀, 축산, 임업 및 공통부분 지원비중은 증가하였다.

(단위 : 억원)

	계획 (A)	집행실적(B)	대비 (B/A)
계	68,574	68,527	99.9
- 쌀	24,389	32,693	134.1
- 원예특작	2,991	1,203	40.2
- 축산	4,682	5,934	126.7
- 임업	3,444	3,993	115.9
- 공통	18,917	11,361	60.1
- 기타	14,151	14,343	94.3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따른 투융자계획(1999~2005)>

(단위 : 억원)

	총투융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 타
합 계	450,526	378,384	47,169	24,973
1.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149,663	130,593	15,290	3,780
○ 재해에 대비한 영농기반 정비	50,884	50,854	300	-
○ 농지의 정비 및 관리	62,103	53,336	8,767	-
○ 친환경 농림업의 육성	14,312	11,795	1,859	658
○ 산림자원의 확충	22,364	14,878	4364	3,122
2. 건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	77,811	71,927	1,986	3,898
○ 교육 및 훈련	9,080	8,936	144	-
○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지원	45,628	45,468	160	-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23,103	17,523	1,682	3,898
3.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18,063	15,842	1,579	642
○ 첨단 농림업기술 개발	14,449	12,556	1,578	315
○ 농림업의 정보화 지원	1,057	947	-	110
○ 농림업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2,557	2,339	1	217
4.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87,142	67,959	5,118	14,065
○ 산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	48,826	37,733	351	10,742
○ 소비자 유통기반 조성 지원	11,211	7,283	3,071	857
○ 물류체계, 정보·교육 지원	5,311	4,749	161	401
○ 농산물 가공산업의 지원	1,199	868	-	331
○ 소비자보호의 강화	2,365	1,981	360	24
○ 축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6,628	6,346	33	249
○ 임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4,169	2,850	282	1,037
○ 농림수산물수출기반 조성 지원	7,463	6,179	860	424
5.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의 증진	81,304	55,520	23,196	2,588
○ 농촌의 다양한 산업 유치	19,965	13,290	5,009	1,666
○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41,404	26,741	14,663	-
○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19,935	15,489	3,524	922
6.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36,543	36,543	-	-
○ 농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지원	26,488	26,488	-	-
○ 농업인의 부담경감 지원	10,055	10,055	-	-

나. 수산업·어촌 투융자 추진성과 및 평가

2003년도 수산업·어촌투융자 실적은 국고기준 8,365억원이며, 2002년에 비해서 400억원이 감소한 규모지만, 제1단계(1992~1998) 농어촌 투융자 집행실적의 연평균 5,361억원에 비해서는 3,004억원 증액된 것으로서 대폭 증가된 것이다.

이는 수산부문의 예산중 자원조성, 수협경영개선, 어업질서유지, 어업인 경영자금 지원 확대 및 어가부채경감 특별대책에 따른 이차보전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능별로 보면 어업인 육성, 영어자금, 수협경영개선 등 어업인 경영지원 3,446억원(41.2%), 어항시설, 어촌종합개발 등 어촌기반시설 2,275억원(27.2%), 연근해 및 원양어선 구조조정 등 어업구조 및 어로설비 300원(3.6%), 기르는어업 육성, 인공어초 시설, 어업질서 등 자율관리어업 육성 1,739억원(20.8%), 수산물 유통개선 540억원(6.5%) 등에 집행되었다.

3.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가. 2004년도 농림예산편성 방향

2004년도 농림예산은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고 농업인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새로운 농정수요에 부응하고,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피해농업인 지원대책을 적극 뒷받침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첫째, 농가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최장 8년까지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대폭 개편하고, 논농업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을 3ha에서 4ha로 확대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농가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재해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부채대책 추진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를 반영하였다.

둘째, 농업인 교육·의료·복지, 지역개발 등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확대하고 1ha미만 영세 농어가의 영유아자녀양육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촌투자촉진을 위해 농공단지조성, 녹색농촌체험 활동, 농촌투자유치센터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폐비닐 수거비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농촌을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친환경 농업육성 및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단계에서부터 부적합한 농산물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산물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양곡수매 관리와 생산조정 등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여섯째, 농산물의 유통개선부문은 내실화를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하드웨어는 기존시설의 보완 및 기능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유통 소프트웨어 확충을 위해 물류표준화, 물류기기 공동이용 등 물류효율화를 지원하고, 농업관측과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과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지식·기술농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조성 부문은 재해예방·완공위주로 수리시설개보수·배수개선 및 용수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소요를 반영하였다.

나. 2004년 농림예산 규모

2004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2003년 추경예산(9조 9,783억원)보다 1.4% 증가된 10조 1,213억원이며, 농림부소관 예산규모는 8조 8,825억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4년 농림부소관 예산 기능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3 예산 (A)	2004 예산 (B)	증△감 (B-A)	%
<농림부문 예산 합계>	99,783	101,213	1,430	1.4
□ 농림부소관 (FTA대책 예비비 포함시)	88,186 (88,186)	88,825 (94,364)	639 (6,178)	0.7 (7.0)
○ 소득지원 및 부담경감	17,106	20,257	3,151	18.4
○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1,174	2,445	1,271	108.3
○ 농업체질개선	8,577	9,197	620	7.2
○ 생산기반조성·기계화	19,672	15,714	△3,958	△20.1
○ 양곡수매지원	10,077	8,164	△1,913	△19.0
○ 채무상환예산	29,912	31,249	1,337	4.5
○ 기본적경비	1,668	1,799	131	7.9
* 직불성 예산 (FTA대책 예비비 포함시)	6,683 (6,683)	7,779 (7,968)	1,096 (1,285)	16.4 (19.2)
□ 농진청소관	3,924	4,217	293	7.5
□ 산림청소관	7,673	8,171	498	6.5

* 2004 FTA 대책 예비비 : 5,539억원

다. 2004년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004년도 수산분야 예산은 WTO/DDA 체제에 대비한 수산업 경쟁력제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첫째,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장정화 등 어장환경 개선을 지속추진하고, 바다목장 조성 등 어족자원 조성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자율관리어업을 하는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해외어장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조사와 과학적인 자원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연근해 어선감척과 원양채낚기

어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노후연안어선 대체는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확대 지원하고,

셋째, 영어자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을 적정화하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 제정시행에 따른 보험료 등을 확대 반영하고, 영어자금, 어가부채경감대책 등 어업인 부담경감 및 각종 정책자금의 이차보전 지속으로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넷째, 어항시설의 확충 및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직거래 시설과 유통기반조성사업, 냉동가공시설 등 수산물 가공 처리 투자는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감	(%)
계		8,365	8,595	230	2.7
분 야 별	◆ 자원관리형어업 육성 및 구조조정	2,039	2,019	△20	△1.0
	○ 자원조성	853	904	51	5.9
	○ 기술지도·자원조사 관리	165	181	16	9.4
	○ 기르는어업육성	344	153	△191	△55.5
	○ 어업구조조정	238	314	76	31.9
	○ 어선건조·설비현대화	62	41	△21	△34.2
	○ 어업질서 유지	377	426	49	13.0
	◆ 어업경영지원 및 어업기반조성	5,721	5,941	220	3.8
	○ 어업경영 지원	1,584	1,610	26	1.6
	○ 어가부담경감이차보전	973	869	△104	△10.7
	○ 수협경영개선	456	896	440	96.6
	○ 어업인 육성	209	4	△205	△98.2
	○ 어항어촌개발	2,275	2,311	36	1.6
	○ 수산기술연구	224	251	27	12.3
	◆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605	635	30	5.0
	○ 수산물유통기반조성	325	229	△96	△29.4
	○ 가공산업 육성	215	330	115	53.2
	○ 위생·안전관리	17	20	3	16.0
○ 수출지원 등	48	56	8	17.2	

• **Ⅱ.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개혁17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28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39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개혁

가. 농업협동조합

(1)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운영

(가) 구성 배경과 과정

정부는 농협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발적 실천을 통한 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이해관계인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농협개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농협개혁위원회”를 발족(2003.4)하였다. 농협개혁위원회는 농민단체 8명, 학계 등 전문가 5명, 조합장 6명, 농협중앙회 임원 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농민단체 4명, 농협중앙회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을 운영하였다.

농협개혁위원회는 ‘농업인을 위한 농협 구현’, ‘농업계 합의에 의한 자율개혁 및 제도 개혁’, ‘중앙회와 조합의 동시 개혁 추진’ 등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농협개혁에 대한 논의를 집중시키는 한편 구체적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운영경과

농협개혁위원회는 2003.4.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3.12.16일 제11차 회의까지 총 11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중앙회와 조합의 개혁과제에 대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하였다.

제1차 회의는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과 아울러 위원장 선임에 대해 농협과 농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제2차 회의(2003.5.20)에서 농협대표와 농민단체대표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고, 회의진행은 농민단체대표가 맡도록 결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현판식을 거행하여 농협개혁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다.

제3차 회의(2003.5.29)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농민단체의 농협개혁 20대 요구사항과 농협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 15개의 중점 개혁과제를 채택하였다. 개혁과제는 중앙회 부문과 조합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앙회의 개혁과제로는 중앙회 신경분리, 지배구조 개선,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개편, 자회사 정비 및 운영개선, 교육지원사업 강화, 품목조합 및 연합회 육성, 경제사업 활성화, 계통구매사업 개선, 인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조합의 개혁과제에는 조합발전을 위한 규정개선, 조합 책임경영체제 확립,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조합 경영투명성 제고, 조합원의 사업 참여 확대, 인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제4차 회의(2003.6.16)에서는 중앙회 신경분리, 계통구매사업 개선, 농업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축산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 4개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경제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후 제5차 회의(2003.6.26), 제6차 회의(2003.7.3), 제7차 회의(2003.7.21), 제8차 회의(2003.8.13)에서는 중앙회의 신경분리에 관하여 집중논의하였으며, 2004.9.4일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는 농협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농협과 농민단체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된 의견을,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민단체 각각의 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제10차 회의(2003.10.16)에서는 입법예고된 정부의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경분리에 대해서 농민단체는 3년내 추진을, 농협은 기한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각각의 안을 정부에 추가 건의하였으며, 제11차 회의(2003.12.16)에서는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2) 일선조합의 구조조정 지속 추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전년말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11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신규 결정하고 재무구조개선 권고·요구를 하는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2년도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에 있어서도 합병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조합 중 합병이 불가능한 6개 조합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 후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인근 우량조합으로 계약이전하였고, 합병이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합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이행상황이 미흡한 조합에 대하여는 추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부과하거나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구조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도 102개 조합에 총 7,789억원(출연 1,771억원, 대출 6,01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 바,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65개 조합에 1,709억원을 5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였고, 30개의 합병조합에 출연금 320억원과 대출 4,30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출대상조합의 계약을 인수한 7개 조합에 계약이전 손실금 보전을 위해 1,451억원을 출연하였다. 이들 조합에 대출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도 중에 3차례에 걸쳐 5,163억원의 상호금융예금 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3년도에 10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고, 33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으며, 부실이 과다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6개 조합이 파산으로 퇴출되었다.

2003년도 결산결과 조합 경영수지는 합병 등 구조개선의 노력으로 크게 개선되어 전년도에 79개이던 적자조합이 26개로 줄어들었고, 적자규모도 전체 294억원으로 전년도 1,199억원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은 6,44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253억원이 증가하였다.

경제·신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전체 경제사업실적은 24조 8,891억원으로 전년 대비 0.9%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평잔액은 97조 2,8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성장하였고, 상호금융 대출도 64조 6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 성장하였다.

(3) 2004년 협동조합개혁 추진계획

(가) 농협개혁 추진

<농협개혁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농협은 그동안 농업근대화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지주회사화 등 금융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유통이 대형화되면서 전통적 농협모델은 위기를 겪게 되었다.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 농협은 전통적인 운동체적 협동조합 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 전문화, 기업화하는 자기변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농협은 영세한 영농규모 등 열악한 농업여건 하에서 규모화 및 전문화 등이 미흡하여 최근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세한 읍면단위의 시스템 하에서 농협에 거는 기대와 실제 역할 간의 괴리가 커지고, 조합경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에 의한 조합을 해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금융시장 구조조정 등 환경 변화에 농협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탈바꿈 하고,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주체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농촌의 복지향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경위>

1999년도에 개정된 현행 농협법 부칙에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01년도에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하여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 결과를 실시한 후 이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2002. 6)하였다. 연구보고서에는 신경분리 1단계로 현 체제 내에서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2단계로는 자본금 확충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국회 제출 후 2년 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농협개혁에 대한 농업인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농협법 개정 추진과정은 과거와는 달리 농협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 개혁 원칙하에 농협중앙회 내에 농민단체, 조합장 등 농협 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2003.4)하여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그 합의안을 정부에 건의(2003.9)하였다.

정부는 이 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17대 국회에 제출(2004.7.9)하여 확정하였다.(2004.12.9)

<주요 개정내용>

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되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전무이사)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유지토록 하였고, 대표이사는 집행간부의 인사권을 보유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책임경영을 촉진토록 하였다.

둘째, 이사회 내에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를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 감독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앙회 전체 차원의 통합 조정이 가능하도록 소이사회 결정을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셋째,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회계 및 유통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폭을 확대하였다.

넷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농협에서 자본금 확충 등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대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일선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경영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일 이후 선출되는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연속 12년)로 제한하되 중임은 허용하였다.

둘째,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선거의 여파가 조합경영에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불법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셋째,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장 임기 개시 직전 회계연도말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회계감사실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조합장 임기 개시 후 2년이 경과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하였다.

넷째, 중앙회 총회와 대의원 선출시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별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 부여하였으나 소규모 조합의 권익대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이나 감사 선거 시에는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다섯째,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합간 경제사업 연합체를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여 연합자회사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자기자본의 20%인 출자제한을 자기자본까지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가 품목조합연합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품목조합연합회에 지역조합의 준회원 가입도 허용하였다.

여섯째, 조합의 결산 잉여금 배당시 출자에 비례한 배당보다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을 우선하도록 개선하고,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의결권은 없으나 배당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출자 발행을 허용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경제사업 활성화 등 법 개정 이외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농협 등과 협의하여 2004년말까지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지속 추진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현황>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2001.9월에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2002년부터 전년말 결산 및 경영상태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총 220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로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2004. 9월말 현재 46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고, 85개 조합이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으며, 부실 과다로 합병이 불가능한 9개 조합이 파산으로 퇴출되었고, 78개(합병 3, 재무구조개선 75) 조합이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2002년부터 적기 시정조치를 한 조합 중에서 농협은 99개로 전체 220개 조합 중 45%를 차지하고, 축협은 118개로 54%를 차지하며, 나머지 3개는 인삼조합이다. 이들 220개 조합이 추진한 경영개선실적은 지사무소 통폐합 131개소, 인력감축 1,150명, 고정자산 처분(매각) 866억원, 출자금 감액 126억원 등이다.

지금까지 부실조합 등에 지원한 구조개선자금 지원액은 총 137개 조합에 출연 2,462억원, 대출 1조 6,415억원으로, 82개 재무구조개선조합에 7,120억원을 대출 지원하였고, 46개 합병조합에 출연 710억원과 대출 9,29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약 이전한 9개 조합의 손실금 보전을 위해 인수조합에 1,752억원을 출연으로 지원하였다.

<2004년도 추진방향>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4년도 일선조합

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7% 미만에서 0%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되도록 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화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며, 경영개선 이행상황이 우수한 조합에 대하여는 자금지원기간 단축(5년 → 3년), 이행요건 완화·면제 등 구조개선 추진지원을 강화하고,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부실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2004년 1월부터 부실조사와 관련하여 4개팀(2개팀 확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에 부실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부실규모가 큰 조합 및 합병·계약이전 등으로 퇴출된 조합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부실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 9월 30일 현재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된 부실조사 대상 137개 조합 중 66개 조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가 완료된 조합 중 34개 조합의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 170명에 대하여 24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21개 조합에 대하여는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나. 산림조합

(1) 산림조합 현황

산림조합의 뿌리는 조선시대 향약의 일종인 ‘송계’이며, 1962년 산림법 제정으로 산림조합·산림조합연합회가 조직되었으며, 1980년 산림조합법 제정, 1989년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직선제 도입, 1993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 등의 과정을 거쳐 2000년 산림조합으로 다시 개편(2000.5.1)하게 되었다.

2004년 현재 산림조합 조직은 중앙회와 146개 산림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081명(중앙회 391, 지역조합 1,690)으로 이중 임업기술지도원 803명이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배치되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임업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산림조합 개혁 추진

임업생산의 저수익성, 부재산주의 증가 및 소유규모의 영세성 등 임업 내적인 문제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조합이 사유림 경영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산림조합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산림조합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산림조합법개정안을 2004. 10. 26.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산림조합 개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

산주조합원 가입확대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2015년까지 조합원 소유 산림 면적을 사유림 면적의 약 60%인 280만ha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인 ‘산주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입산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주조합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조합 중 산주조합원이

50%미만이거나 조합원 소유 산림면적이 관할 사유림 면적의 50% 미만인 조합은 중앙회 회원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각종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등 산림조합이 산주중심의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 가입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이 참여하는 진정한 생산자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산림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 정착

상임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던 것을 앞으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출마요건도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종전에는 5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로 완화함으로써 유능한 외부인사가 조합경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중 조합원 이사의 정수를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외부 전문가들이 조합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통해 조합경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부실조합 구조조정

산림조합 상호금융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합별 특별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자본잠식 또는 순자본 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조합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또는 인근 조합과 통폐합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 경영지침을 수립하여 조기에 경영정상화 추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신규증원 억제, 특별상여금 지급 금지,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라) 책임경영 및 지도감독 기능 강화

조합 및 중앙회의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해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에 산림조합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산림청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중앙회 및 일정기준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 경영구조를 발생 가능한 회계 부정 및 경영상의 부조리를 최소화 해나갈 계획이다.

다. 수산업협동조합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이 어업인 자조조직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1,305억원의 무이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자본잠식규모에 비해 지원액이 과소하여 경영개선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일선수협의 부실원인 및 규모 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경영진단을 추진하여 부실이 우려되는 58개 조합은 2009년까지 자본잠식액을 회복하는 목표하에 인원감축, 고정자산 매각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면서 이의 이행을 전제로 2004년부터 7년간 매년 350억원(무이자자금 환산 4,861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회생이 불투명한 부실조합은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였다

이러한 일선수협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한 결과 2002년부터 일선수협의 적자규모가 2001년 $\Delta 2,430$ 억원에서 2002년 $\Delta 16$ 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04년부터는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등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해왔던 구조조정을 2002년말 까지

조기 마무리하여 인력 15.7%(985명), 점포 75개(493개 ⇒ 418개) 축소, 부실채권 감축(12.9% ⇒ 3.9%), 고정자산매각(342억원)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추자 자금지원과 연계하여 경쟁력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2004년부터는 일선수협이 흑자경영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경영자로 하여금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상임이사제 의무도입, 조합장의 공명선거 확립, 감독기능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협법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수협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협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200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일선수협의 예금고객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0.12%에서 0.2%로 상향조정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부실화된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강력한 독립사업부제 확행을 전제로 1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1년 275억원, 2002년 686억원, 2003년 891억원 등 흑자규모가 대폭확대 추세에 있어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유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되어 농산물의 표준규격출하율이 증가되고 선진적인 거래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유통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시장의 변화와 농산물 수급불안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지의 준비태세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유통경로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증가, 소비의 고급화·다양화, 농산물의 과잉 공급기조 등 농산물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유통개혁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생산계획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요 농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관측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농가 10,700호 및 모니터 요원을 1,2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선진 관측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노지채소 위주로 시행해 오던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시설채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최저보장가격제 대상품목을 2000년 10개 품목에서 2003년에는 13개 품목으로 늘렸고, 최저보장가격 산정기준도 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폭락 시에도 수급안정시책 참여농가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과실에 대해서도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 대응력 향상 등 과실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계약 출하사업을 처음 도입한 후 2002년에는 단감, 2003년에는 감귤을 각각 추가하였으며, 대상품목과 계약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계약출하사업 참여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등 계약출하사업을 과실수급안정을 위한 핵심제도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채소생산량의 11% 수준을 계약재배하여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산지 협동조합에 계약재배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자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토록 하고, 조성액에 대응한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2)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확대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표준규격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지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영농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의 조직화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모화·전문화된 일선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을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하여 생산단계부터 상품화·유통단계까지 수확후 품질관리, 공동출하·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전문조직 280여개소를 선정, 유통활성화자금(2004년 2,50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지유통전문조직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지속하여 농산물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시행하며 유통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수익성 제고 및 산지유통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평가를 통해 잘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조직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 산지유통센터를 2001년 196개소에서 2003년 208개소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량의 50%를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브랜드화 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현재 127개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는데 영농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의 인식미흡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은 53.7%('03기준)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표준규격출하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을 2004년에는 전체 공동선별·포장비의 30% 수준인 516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현재 53.7% 수준인 표준규격출하율을 2008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정부는 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고효율·저비용 유통구조인 직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직거래 시설 지원 사업(1998~2002)을 통하여 직거래장터 163개소와 파머스마켓 20개소가 개장되었으며, 농협 및 영농조합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할인점 등 민간대형유통업체의 농업인과의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 업체에 직거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상품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비자 유통업체와 산지 농업인 간 상호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산지 생산자가 소비자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상품성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게 되어 직거래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협동조합 등 소비자 중심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들 단체에 직거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2004년부터 소비자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농산물의 직거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그 동안 도매시장 위주의 농산물 유통에서 벗어나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예약·주문거래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2003년까지 13개소를 개장하였으며, 2006년 까지 3개소를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종합유통센터는 유통단계축소 뿐만 아니라 파렛트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다. 또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선진유통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영중인 종합유통센터는 운영주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개장 6년 차인 2003년도에 2조7,14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농산물전용 도·소매시설로 정착되어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지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지 생산자조직을 종합유통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할인점·판매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판매가맹점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매취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정부에서는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확대하고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비지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와 직거래가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농산물의 44.6%수준이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의 중요한 과제이다.

도매시장은 현재 32개소가 개장·운영중에 있으며, 2004년중 2개소(광주서부, 서울강서)를 추가 개장하여 도매시장 건설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2003

년도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전체 농산물 거래량 대비 4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유사도매시장 등의 거래비율은 29.2%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 정부의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시설여건·거래액 등을 감안하여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2004. 6월 서울강서 시장에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반면, 중앙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를 의무화하여 기준가격 형성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매시장을 경유하더라도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출하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역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중도매인의 진·출입을 확대하여 경매참여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도매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도매시장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도매시장법인을 대상으로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농산물 전자경매는 1994년 11월 개정된 농안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일부 도매시장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입기반을 넓혀왔으며, 1999년 4월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전자경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부터 도매시장법인에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본격화하였다.

전자경매는 2004년 중 신규 개장된 2개 도매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에 지원, 현재 32개 도매시장 81개 도매시장법인 전체에 도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도매시장에 상장 경매된 농산물 가운데 전자경매로 처리된 농산물도 첫해인 2000년에는 전체 거래량의 4%에 불과했으나, 2001년 32.8%, 2002년 55.5%, 2003년말에는 64.2%까지 높아졌다. 외형적으로 불과 4년만에 전자경매가 수 지식 경매를 누르고 도매시장의 가장 주요한 거래방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러한 전자경매는 도매시장 농산물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경매결과 입력요원, 경매사 감축 등에 따라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중·상급품에 대한 경락가격을 높게 형성시키고 있어 상급품의 출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출하자의 수취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전자경매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락가격의 실시간 제공 역시 경매절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전자경매는 경매현장에서 경락값이 즉시 공개되는 특성으로 그 동안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 특정인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거래과정이 투명해짐으로써 도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출하자의 부담경감과 하역기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표준하역비 제도 역시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출하자가 부담하였던 농산물에 대한 하역비를 2003년말 현재 전체 하역비 대비 35.8% 수준인 223억원을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등을 통하여 물류체계를 유인, 장기적으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출하체계개선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의 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2년도 국가물류비 72.8조원은 국가GDP 596조원 대비 12.2%에 달하며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과 비교시 높은 편이며, (미국 9.5%, 일본 9.6%) 농산물의 경우도 물류비 7.3조원은 생산액 30.3조원 대비 24.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피가 크고 부패가 쉬운 배추 등 업체류는 인력에 의해 상·하차되어 물류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 절감이 필수적이다.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산지에서부터 농산물이 포장되고 파렛트로 적재되어 출하되고, 소비자 도매시장 등에서는 하역기계화 체계가 구축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선,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내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인상하여 포장품과 비포장품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농산물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90%이상인 되고 소비자 구매패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농산물의 포장출하율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역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보급뿐만아니라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물류기기 구입시 보조 50%이며 물류기기 임차시에는 임차료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식생활 보장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304천명의 생산자와 18천명의 관계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및 농산물 생산·수확후 처리단계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신선채소·과일, 수출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근거규정·교육체계 등을 마련한 후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60천건을 실시하여 위반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성조사 범위를 재배환경과 미생물로 확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면적 재배작물에 적용할 농약의 확대를 위해 직권등록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까지 30작물, 67품목의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데 이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위해 제재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학적 정성·정량분석법을 개발하고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전성조사에 참여하는 농소정협의회를 14회 운영하였고, 농·소·정협력사업을 통한 도시 소비자의 농업 현장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식품안전자문단을 2003년말 구성하여 소비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WTO체제 출범 이후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등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는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 확충과 품목별 전문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산물 생산, 유통, 소비량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도록 생산자 직거래 판매장 5개소와 산림조합중앙회조직 직매장 95개소, 임산물유통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관상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유도 및 직거래판

매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수생산단지유통센터 1개소(2004년 6억원)와 임업후계자들이 생산한 청정 임산물의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업후계자임산물유통센터 1개소의 조성사업비(2004년 7억원)를 지원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3천만m³ 내외의 목재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는 산림이 65%로 목재자원이 부족하여 자급율은 6%로 낮은 실정에 있어 국산 소경재의 활용을 위하여 1997년에 여주목재유통센터를, 2004년도에 동해사업소를 준공하여 국산재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17개소에 목재집하장을 조성하여 국산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임산물의 수급불안과 소비지시장의 급격한 구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임산물의 출하조절을 위한 저장·건조시설 66개소(72억원)를 지원하고, 홍수 출하기 임산물의 적기 수매를 위한 단기임산물 수집자금과 농안기금을 산지 생산자조직에 지원하여 임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 경영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조직의 미흡 등으로 전문적인 임산물 생산자조직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바, 정부는 규모화·단지화·전문화된 영농조합 등 법인경영체를 중심으로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육성하여 생산·가공·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 및 산지와 시장의 출하조절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선별자금 등 표준출하자금(2004년 5억원) 및 수매자금(2004년 50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밤, 대추, 표고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한 시장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별 유망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지역 특산물을 중점 개발토록 60개소의 임산물 주산 단지를 지정하여 주생산 품목별 기초조직을 육성하고 있으며, 유통의 효율성 및 상품성 제고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밤, 표고, 대추 등 15개 품목에 대한 표준출하규격을 제정·고시하고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출하하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포장 자

재비를 지원하고,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으로 지역별 브랜드화된 임산물의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밤을 시작으로 2004년도에는 표고 품목을 추가하여 산지 생산현황, 시장가격, 수출 및 수입 등 해외시장동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생산·출하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임업관측사업을 실시(2004년 2억원)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에 의한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90명의 임업인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2004년 1억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임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밤 등 주요임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장비지원, 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 활용에 의한 토양개량사업 등 친환경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임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기술지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장뇌 등 수입임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유통시장 정화활동 및 지도·홍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산림조합 계통 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임산물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수산물은 강한 변질성, 다양한 품목과 크기로 인해 근본적으로 유통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어 어획후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유통구조가 필요하며, 정부는 유통의 왜곡에 의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수많은 유통개선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실질적인 거래형태가 농안법에 위배되고, 가격 등 거래정보가 투명하지 못하여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도매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도매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지난 2001년 5월부터 가락, 노량진, 구리 등 수도권 3개 도매시장에서 패류 11개 품목에 대해 실질경매를 추진하여 2002년 8월까지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2003년 9월 1부터는 선어부류까지 확대하여 2004년 1월에는 선어 전품목이 실질경매를 통해 거래되도록 하므로써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매 당일 어대금 정산으로 생산·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도매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경매시행 후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생산 어민의 직출하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대금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생산자 단체인 수협이 직거래 사업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통체계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셋째, 물류표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규격출하를 촉진하므로써 수집과 분산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물류의 신속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넷째, 수산물 물류기반 확보를 위해 부산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산지 수협의 위판장, 산지종합처리시설 등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가. 농림행정 추진조직 개편

(1) 농림부

(가) 실무공무원 직급상향 조정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앙부처의 기능변화에 맞게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는 6급이

하 정원의 10%를 5급으로, 소속기관은 7급 정원의 5%를 6급으로 직급상향조정을 하기로 함에 따라 6급 정원 27인(2004 : 16, 2005 : 11)을 5급으로, 7급 정원 45인(2004 : 24, 2005 : 21)을 6급으로 2년(2004~2005)에 걸쳐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는 6급 정원 16인을 감축하고 5급 정원 16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소속기관은 7급 정원 24인(농관원 16, 수과원 4, 식검 4인)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해외 악성가축질병과 수입식물의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인력 15인 증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 (5급 1, 6급 4, 7급 5), 국립식물검역소 5 (6급 1, 7급 2, 8급 2)] 하였다.

*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2. 9), 농림부령 제1457호, 2004. 2. 11)>

(나)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림조직 개편단행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의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제정·시행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局)·과(課)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 농업인 복지증진 업무등을 전담하여 추진할 「농촌사회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의 대폭 개편을 단행하였다.

첫째, 농업인들의 교육·의료·복지 등의 삶의 질 향상과 농외소득원 확충을 전담할 농촌사회과를 신설하였다.

둘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局)·과(課)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능을 이관·조정 신설하였다.

농업정책국·식량생산국 및 농촌개발국을 각각 농업구조정책국·식량정책국 및 농촌정책국으로 개편하여 공간개념의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정책기능을 강화했으며, 농업정책과·농촌인력과·개발정책과 및 농촌용수과를 각각 구조정책과·경영인력과·농촌정책과 및 기반정비과로 개편하여 농업구조 개선,

농업경영체 지원, 복지·농촌지역개발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농업정보통계관실을 투융자평가통계관실로 개편하고, 투자심사담당관을 ‘재정평가담당관’으로 개편하여 119조원 투융자사업에 따른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했다.

넷째, 농정 전문가 채용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식량정책국장, 축산국장, 종자관리소장의 직위에 농업연구관·축산연구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직렬을 확대하였으며, 농촌관광 등 새로운 업무분야에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523호, 2004. 8. 19),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81호, 2004. 8. 20)

(다) 농산식품의 안전성 및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실무인력 보강요청

농산물의 안전성 및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성조사 기능강화에 필요한 인력보강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소 증설, 농축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른 동식물의 국경검역기능 강화 등 2005년도 농림부의 소요기구 및 소요정원을 2004년 5월 14일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관리인원과 우수농산물관리(GAP)업무 등 전문인력을 보강
- 국립식물검역소의 LMO(유전자변형생물체)국경감시 검역인력, 공·항만의 검역인력 보강 및 해외병해충연구소 신설 등
- 종자관리소의 품종보호심사관 및 종자관리 정보화 전문인력, 재배시험인력 등 보강

(라) 농림부 「진단·변화관리」 추진

이번 실시하는 진단·변화관리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정부가 환경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 혁신하는 학습조직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현재 민·관 합동(농림부+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능률협회·성균관대학교 컨소시엄)으로 『농정혁신 2030팀』(팀장 : 차관)을 구성, 향후 6개월(6.28~12.10)간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진단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맞게 농림조직과 기능, 행정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혁신방안을 찾아내고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술할 계획이며 특히, 본부와 산하기관을 연계하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능·인력 재편, 주요 업무절차 개선(BPR), 행정문화 등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맞게 농림부 명칭 바꾸기, 동식물위생방역기능 강화, 농식품안전성 제고, 농촌 복지 증진, 농촌지역개발,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 집행적 기능의 지방·민간이양 등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단을 실시하여 농림부 기능과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2) 수산분야 조직정비

해양수산부직제 개정(2004.1.29)을 통해 해양수산부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작업이 이루어졌다.

동일 부서에서 어업협상업무와 지도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협상전략 구상과 불법어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업교섭지도과”를 “어업교섭과”와 “어업지도과”로 분리하였다.

한편, 한·중, 한·일 어업협정 체결 등으로 달라진 해양여건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의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어업지도선 운용상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를 “동해어업지도사무소”(부산 소재)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목포 소재)로 분리시켰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 “연구기획실”(3급 상당)과 “연구관리과”를 신설하여 수산 관련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어업기술 보급업무를 담당하는 17개 수산기술관리소를 13개 출장소와 통·폐합하여 25개 해양수산사무소를 신설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함께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원스톱 해양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수산식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본부에 “품질위생과”를 새로이 신설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을 2005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수산관련 연구성과를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산림청

(가) 기능별 조직개편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과 기능조정방향이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국정원리와 지방분권을 반영한 기능조정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3.4.7.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자체 기능조정 방안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본청에서도 자체 조직진단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및 민간전문가 등 각 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4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설명회를 거쳐 산림행정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방안은 9월 15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보고되었고,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조직개편안이 10월 31일 확정되었다.

확정된 “산림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라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1.9)와 동시행 규칙(2004.1.13)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청의 경우 산림행정의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종전 소유별 조직체계를 기능별 조직체계로 개편하였다. 즉, 기존의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을 각각 산림정책국, 산림자원국, 산림보호국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산림행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와 임업기술을 접목시켜 과학적인 산

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계과를 신설하였고, 남북임업협력분야와 국제협력 업무의 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였다.

미래전략적 핵심기능의 효과적인 수행과 산림청의 행정혁신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및 인사사무 등은 행정법무담당관이 혁신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행하게 되었고, 기존 행정법무담당관의 업무중 법제 및 소송사무 등의 기능은 공보담당관이 공보법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혁신담당관은 2004.3.22. 행정자치부의 혁신전담조직 일괄직제에 따라 혁신인사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획관리관실은 혁신인사담당관실·기획예산담당관실·공보법무담당관실·국제협력담당관실로 구성되게 되었고, 산림정책국은 산림정책과·산지관리과·국유림경영과·정보통계과 등 4개과를, 산림자원국은 산림자원과·경영지원과·임산물이용과·산림휴양과 등 4개과를, 산림보호국은 산림보호과·산불방지과·치산과 등 3개과를 두게 되었다.

한편, 다양한 산림기능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산림연구의 과학화·세계화·종합화 및 연구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고, 임업시험장을 기능별로 특성화하고 그 기능에 맞게 명칭을 '연구소'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은 각각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산림병해충방제 업무의 비중 증가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조정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의 항공진화과를 산림항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의 증원은 없었으나 1관 3국 16과 체제에서 3국 1관 17과 체제로 1개과가 증설되었다.

(나) 직급상향 및 증원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2004.2.9.)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실무공무원 직급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정원의 범위안에서 일부 직급이 조정되었다. 따라서 본청의 6급 정원 5명이 5급으로 조정되었고, 소속기관의 7급 정원 5명이 6급으로 조정되었다.

본청의 조정된 5급은 혁신인사담당관실의 민원, 국유림경영과의 송무, 산림자원과의 자원정책, 경영지원과의 산촌, 임산물이용과의 가공기술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05년에도 산림청 본청에 6급 3명이 5급으로, 소속기관에 7급 4명이 6급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4년 소요정원 협의결과 확정된 임산물품질인증과 관련한 증원이 있었는데, 산림청 본청에 6급 1명 및 국립산림과학원에 연구관 1명과 연구사 2명이 증원되었다.

또한 청년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일괄직제로 실무인력 증원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직제와 시행규칙이 개정(2004.5.24.)되어 산림청에 백두대간 보호업무를 담당할 6급 2명과 7급 3명이 증원되었고, 산림항공관리소에 진천지소 신설 및 5급 1명, 6급 2명, 별정직 7급(정비사) 1명, 8급 1명, 기능직 6명이 증원되었다.

※ 조직 및 정원(2004.10.31현재)

- 조직 : 산림청(3국 1관 12과 5담당관)과 8개 소속기관
 -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4개 연구소),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7개 지소), 5개 지방산림관리청(25개 국유림관리소)
- 정원 : 1,483명(산림청 191, 소속기관 1,292)

(다) 향후 조직개편 추진계획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산림휴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5.1.1 시행계획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2003.12.31. 제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에 백두대간보전과를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신설하며 이와 관련된 인력의 증원(24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1) 농업분야

2004년도에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규제정비에 따라 과거 양 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에서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전환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농림 분야에서도 이를 적용해 나가기 위해 기존 규제의 일제정비 지침을 마련하여 농지·축산·유통분야 등에서의 안전성, 위생, 검역, 환경 등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고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경제적 성격의 규제는 과감히 폐지 또는 개선(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금년도 규제정비 계획은 정비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우리부 소관 기존 규제를 4개년에 걸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규제방식은 직접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 민영화, 자율규제 등 비 규제 대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규제개선 파급효과가 큰 규제사무를 초년도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우리부 소관 규제사무 중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출하지도 및 자체검사의무 규정 등을 폐지하고 인삼류 검사신청 처리기간의 단축 및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출자한도 제한 완화 등 약 40여건의 규제사무를 정비할 계획이며 그동

안 쌀 자급 달성과 국토환경 보전 등을 위해 규제위주로 운영되어온 농지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농지제도분야』를 제로베이스 방식에 의한 정비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부는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편의 및 공익증대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이를 통하여 공무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등 부조리와 부패의 소지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2) 산림분야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민간 자율성이 필요하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산림경영의 자율성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도록 산림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2003년도에는 산지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시행령을 제정(2003. 9.29)하였고, 산지관리법시행규칙(2003.10.22)을 제정하였다.

주요 규제개혁 내용은 임지별로 구분되어 있던 인·허가 체계를 산지전용허가·신고로 통합하여 허가권자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농림어업용 시설 등은 허가사항에서 산지전용신고 사항으로 변경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부담감소를 위해 복구비예치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산림에 대하여 국민의 손실보상을 위해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04년도에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법 분법화로 각종 규제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국민편의적인 법령체제로 정비를 추진중이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유림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률 목적에 부합하는 법령체계로 규제를 재정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수산분야 법령정비

수산관계 법령 정비에 있어 2004년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구획어업의 선복량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수산업법」을 개정중에 있고 둘째, 낚시어선의 선교 등 외부에 승객 준수사항 등을 표기한 표식의 게시 의무 등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낚시어선법」을 개정중에 있고, 셋째, 유어행위 제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자 「내수면어업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넷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다섯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여섯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51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63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77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79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90
6. 친환경농업의 육성 99
7. 농어가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107
8.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130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가. 영농규모화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젊고 유능한 쌀전업농에게 장기저리의 이자(매매: 연리 3%, 임대: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동 기금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채특회계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결손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규모확대를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그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아울러 2004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3ha이상 농가가 출현토록 노력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상환기간은 10~30년 차등화하고 균분, 거치, 체증상환 등 자금상환 방식을 다양화하여 쌀전업농의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2004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7,688ha, 3,092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

가 2,770ha, 1,840억원, 농지임대차가 4,868ha, 1,215억원, 농지교환·분합이 50ha, 3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각 시·도별 농업진흥지역면적, 쌀전업농수, 2004년 사업신청액, 전년도 집행실적, 농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쌀전업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규모확대가 촉진될 전망이다.

<2004년 영농규모화 추진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4 계획(A)		2003 실적(B)		증 감 (A-B)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7,688	309,212	8,069	312,060	△381	△2,848
농지매매	2,770	183,992	2,318	167,907	452	16,085
임 대 차	4,868	121,505	5,678	140,151	△810	△18,646
교환분합	50	3,715	73	4,002	△23	△287

나. 경영이양 직불제 운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경작 경력이 10년이상이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년간 계속하여 벼를 경작(질병·사고 및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3년중 1년이상 경작자 포함)하고, 연령이 63세~69세 범위의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쌀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장기임대 하고 영농에 은퇴하는 경우 ha당 매도시 연간 2,896천원(분할지급시 매월 241천원씩 연령에 따라 2~8년간 지급), 임대시는 연간 2,977천원을 1회에 한하여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2ha까지 이다.

아울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121) 체결에 따라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이양직불금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70세이상 72세이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매도·임대 동일한 조건으로 ha당 2,977천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해 주고 있다.

2004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4,650ha, 13,628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2003년도 사업비 초과 신청접수 물량 및 2004년도 영농규모화사업 예산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금년에는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경영이양직불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분할지급 방식 등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생산성이 낮은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촉진하여 이들의 농지가 쌀 전업농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는 경영이양 대상농지를 농업진흥지역내 경영이양 대상농지에서 쌀전업농이 집단화 할 수 있는 진흥지역내 우량농지와 향후 농지은행 보유농지에까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2004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4 계획(A)		2003 실적(B)		증 감(A-B)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4,650	13,628	1,500	4,335	3,150	9,293
농지매매	2,650	7,674	870	2,514	1,780	5,160
임대차	2,000	5,954	630	1,821	1,370	4,133

다. 생산자조직 중심의 계열화·브랜드화 추진

WTO체제 출범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규모화 및

계열화를 통한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판매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선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작목반·영농조합을 계열화함으로써 일선조합이 실질적인 산지유통주체가 되도록 하고, 일선조합은 다시 광역의 연합조직에 계열화하여 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작목반·영농조합과 같은 기초생산자조직은 생산에 있어서 정보교환 등 생산활동에 치중하고, 수확후 관리, 소비지 출하 등을 일선조합이 수행하도록 하며, 광역의 연합조직은 유통정보, 신상품개발, 브랜드화, 판촉 등 마케팅 활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조직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 중심의 공동 출하사업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80개소의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지정하여 유통정보의 수집·분산,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등 품목별 지도·지원의 중심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연합사업 확대를 통해 산지유통혁신과 실질적인 생산출하조절을 담당하는 품목별 연합조직의 결성을 촉진(2004년 20개 연합조직)함과 아울러, 해당품목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연합조직에 자조금 조성을 보조지원(2004 : 12억원)함으로써 생산자조직 자율에 의한 수급조절능력이 배양되도록 할 계획이다.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해당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개보수·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5년도 종합자금지원은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10백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 사업이 통합되어 총 운용규모 8,511억원(농특자금 1,702억원, 농협자금 6,809억원)으로 반영하였다.

농업종합자금은 기존 농림사업자금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자금을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풀(pool)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수시 신청에 따라 연중 수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금공급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까지 실적	2003실적	2004계획	2005계획
합 계	1,041,500	452,300	578,900	851,100
농특자금	496,200	106,400	115,800	170,220
농협자금	545,300	345,900	463,100	680,880

2003년에는 3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 관광농원 개발, 농촌민박마을 조성, 자가 배합 사료제조 시설 지원사업을 종합자금으로 통합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천만원 이상 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산지일반가공육성, 전통식품개발,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 후계농업인육성자금, 객토자금을 농업종합자금에 통합하였다. 시중금리의 하락추세와 어려운 농업경영여건을 고려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낮추어 지원하였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4년 3월 1일부터는 대출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전업경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자

금중 농업종합자금제로의 통합이 바람직한 사업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종합자금제는 정책자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부실화율을 낮추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도 남아 있다.

앞으로 대출절차를 더욱 표준화하고 대출관련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담당자 확충 및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취약한 사업계획 수립능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경영체를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결과와 자료화와 경영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징후의 사전 감지, 농가에 경영진단자료 제공, 컨설팅사업과 연계 등 사업성공위주의 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지난 1981년부터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까지 총 122,204명의 후계농업인을 선정하여 22,076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

2004년도에는 1,125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100백만원씩 총 800억원을 개인별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 분	1981~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 인 원 (명)	105,031	4,819	4,674	3,270	2,500	1,910	122,204
○ 지원자금(억원)	1,601,630	150,000	150,000	110,100	100,000	96,000	2,207,630

(2) 법인경영체 지원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의 대행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소규모 농가들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영농조합 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 현재 5,432개소(영농조합법인 4,274개소, 농업회사법인 1,158개소)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의 난립 및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 회생불가능 법인에 대한 퇴출 유도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3) 농업교육의 내실화

새천년 지식기반사회와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03년도에는 2,900백만원을 지원하여 56,135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체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교육수요자인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요자가 다양한 교육방식과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On-Off Line 및 미디어교육방식을 결합한 『입체식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는 수강신청, 공

급자는 교육홍보, 정부는 교육관리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기관간 경쟁을 통한 수요자중심 교육전환 유도과 인센티브제 정착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성과평가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관간 중복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국가전문행정 연수원 농업연수부에 회계·경영반 등을 개설하여 농업인이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4) 농업경영혁신 추진

농업구조개선투자으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능력향상이 병행되지 못해 투자효과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농업인의 경영혁신노력을 측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2000년까지 60개의 표준진단표를 개발, 보급하였다.

농업인들이 표준진단표 작성을 통해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진단결과를 다른 농가와 비교해 보아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

또한, 보다 고급경영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컨설팅지원사업을 2001년도에는 553개, 2002년도에는 759개, 2003년도에는 847개 농가에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국고 1,965백만원을 지원하여 870개 농가에 대해 우수한 민간컨설팅능력을 농가와 적시에 연계시켜 기술, 경영 등 종합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한 단계 진보시켜 나갈 계획이다.

(5)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9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 2000년에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2001년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 2002년에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완비하고 본격적인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교육을 연간 24,000여명, 농경영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신기술을 전파하는 영농기술교육을 30,000여명, 영농경력이 풍부한 여성을 대상으로 선도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성농업경영자교육과 축산 및 환경분야 등 전문농업경영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부터는 현장출신의 여성농업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연 6회에 걸쳐 여성농업인 교관훈련을 실시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강사 확보 교육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2001년부터 지방 농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정책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절실하게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교양강좌·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2001년에 전국 4개소를 시범운영 한데 이어, 2004년도에는 전국 9개 도에 총 2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후계여성농업인은 2000년에 859명을 선정하였고, 2001년에는 462명을 선정 한데 이어 2002년에는 339명, 2003년에는 264명을 선정하여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개편, 여성의 경우 창업농 신청시 가산점 20점을 부여하여 선정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와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2003년에 3,200명을 이용한데 이어 2004년에도 3,200명이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 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2004년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49천명에 대하여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6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정책과제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개발로 성 인지적(gender sensitive) 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고자 여성농업인정책 과제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9~2001년간 매년 3개 과제 연구를 완료하였고, 2002년도에도 “여성농업인 복지 지표 개발연구”,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연구 완료하여 정책결정 및 추진에 반영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이어 2004년에는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중간평가’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바.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등에 대한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교류 및 육성자금의 확대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임업기능인 영립단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초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숙련된 전문임업인을 양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임업노동력의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406천ha중 71%에 해당하는 4,548천ha가 사유림으로서 소유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립가, 임업후계자를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들을 확대 선발하기 위하여 임업진흥촉진법령을 개정(2000.6.7)하여 지속적으로 선발하여 2003년말 기준 독립가 341명, 임업후계자 1,238명이 선발되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육성자금은 2003년도에는 독립가 60억원, 임업후계자 82억원, 신지식임업인 10억원 총 15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독립가 51억원, 임업후계자 69억원 총 120억원을 지원하고 융자조건도 임도시설의 경우 5년거치 10년상

환에서 10년거치 10년상환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은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10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함과 아울러 기 대출분까지 소급적용토록 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육성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이자율도 현재 3%를 점차 낮춰 이자율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임업용기계인 동력기계톱 등 15종에 대하여 구입시 영세율 적용 확대 및 임업용기계류(10종)에 사용되는 석유류도 면세토록 하였으며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립가,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10명) 확대 및 임업선진국 해외연수 기회(11명)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사.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지난 1981년부터 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까지 총 13,432명의 어업인후계자를 선정, 2,342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

2004년도에는 379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50백만원씩 총 95억원을 개인별 영어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 분	1981~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인 원(명)	10,537	608	625	547	581	534	13,432
○자금(억원)	1,603	159	159	143	143	135	2,342

(2) 전업어가 육성지원

우리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 어가를 확보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전업어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전업어가가 되고자 신청한 분야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가 55세이하인 어가를 전업어가 대상자로 선발하여 2004년까지 2,176호를 전업어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2003년까지 2,078호의 전업어가를 선정하여 1,08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도 98호에 49억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어업경영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선도어업경영체 육성 지원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일반 어가, 수산계학생,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0년까지 총 42개소를 선정하여 34억원을 지원하였다.

(4)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원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996년도말 도입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2003년말 현재 907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바,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매년 정기적인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영어조합법인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가. 생산기반 정비

(1) 진흥지역 중심으로 우량농지에 대한 경지정리 추진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필지의 규모화, 용·배수로 정비 및 구조물화, 농로의 정비와 환지를 통한 분산된 개인농지를 집단화하는 사업으로, 영농기계화 노동시간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어 쌀경쟁력 제고 대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다.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논면적 1,127천ha중 농업진흥지역내 665천ha와 농업진흥지역밖 135천ha를 합쳐 800천ha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추진하여, 2003년 봄까지 전체 논면적의 64%인 719천ha를 완료하였다.

2004년도에는 2003년 가을에 착수한 1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쌀산업 여건과 농업·농촌에 대한 재정수요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2004년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당초 개발목표면적 중 50ha 이상으로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경지정리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 논면적	목 표	2003년까지	2004년계획	2005년이후
○ 사 업 량	1,127	800 (915)	719 (825)	1 (1)	80 (89)
- 농업 진 흥 지 역	770	665 (760)	633 (725)	1 (1)	31 (34)
- 농업 진 흥 지 역 밖	357	135 (155)	86 (100)	-	49 (55)
사 업 비	-	70,024	69,805	219	-

※ 마무리 기준, ()는 용배수로, 도로를 포함한 구역면적

(2) 우량농지 164천ha를 대구획경지재정리 추진

대구획경지재정리는 이미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필지규모가 소구획으로 대형농기계 영농이 어렵고 농로가 없거나 좁아서 농기계 통행에 불편하며 용배수로는 관배수 기능이 겸용이거나 토공으로 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운 지역을, 필지규모는 3,000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를 분리구조물화하며 농로를 대형기계 및 농산물 운반에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 200천ha를 개발할 목표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2003년 봄마무리까지 88천ha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003년도 가을에 착수한 4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가을에는 4천ha를 착수하여 2005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 쌀 산업 여건변화, 농촌·농업에 대한 재정수요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규모화 영농에 꼭 필요한 집단화된 농지 위주로 시행하기 위해 당초 개발목표 200천ha를 164천ha로 재정비하고, 수리시설 개량만으로 영농여건 개선이 가능한 지역은 수리시설개보수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이 사업은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사용과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경지정리함으로써 전문영농조직이 대규모로 영농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쌀생산비를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보다 큰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3년까지	2004년계획	2005년이후
○사업량(천ha)	164	88	4	72
○사업비(억원)	46,886	21,634	1,023	24,229

※ 마무리 기준, 2003년에 목표면적 조정 : 200천ha → 164천ha

(3) 밭작물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밭기반정비 확대 추진

국민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채소, 과일 등 밭작물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제고 및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체 밭 730천ha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110천ha(15%)를 정비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2003년까지 13,09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목표의 53%인 58천ha를 정비하였으며, 2004년에는 1,437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투자하여 5천ha를 정비할 계획이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3년까지	2004년계획	2005년이후
○ 사업량(천ha)	110	58	5	47
○ 사업비(억원)	25,794	13,095	1,437	11,262

(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농작업의 기계화가 확산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계화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유통시설간 농로를 확·포장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주요 간선농로 35천km에 대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까지 14,127억원을 투자하여 목표의 39.7%인 13.9천k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는 1,250억원을 투입하여 1.2천km를 확·포장할 예정이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영농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운반시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촌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로 등 일상 생활도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농촌생활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3년까지	2004년계획	2005년이후
○ 사업량(천km)	35	13.9	1.2	19.9
○ 사업비(억원)	37,071	14,127	1,250	21,694

(5)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등 재해취약시설과 흙수로 8,729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수지를 비롯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2,830개소의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6,400개소이고, 간지선 용·배수로의 경우는 45천km중 53%인 24천km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206개소, 지방관리방조제 3,284개소 등 전국 3,490개소의 방조제, 배수갑문 등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조제 외측보호 사석의 이탈,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제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에 의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사업의 확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3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관리 수리시설 5,354개 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98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902개 지구에 총 29,74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4,036억원을 투입하여 147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구 분	개보수 대상		2003까지		2004 계획		2005 이후	
	대 상	%		%		%		%
	개소							
○ 사업 물 량	12,219	100	6,354	52.0	147	1.2	5,718	46.8
- 농기공수리시설	8,729	100	5,354	61.3	69	0.8	3,306	37.9
- 국가관리방조제	206	100	98	47.6	9	4.4	99	48.0
- 지방관리방조제	3,284	100	902	27.5	69	2.1	2,313	70.4
	억원							
사 업 비	126,149	100	29,741	23.6	4,036	3.2	92,372	73.2

※ 방조제는 반복 개보수계획 반영

(6)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은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수리시설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대책사업이다.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는 235천ha로서 이중 지표배수개선 대상면적은 188천ha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안성천, 삼교천 등의 큰 하천변과 그 지천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하배수개선 대상면적은 47천ha로서 수령논 등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03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및 저습답 235천ha중 126천ha가 완료되었으며, 2004

년도에는 101개 지구에 2,167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25개지구 5천ha를 완공하여 배수 개선율을 55.7%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표배수개선은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대 상		2003년 까지		2004년 계획		2005년 이후	
		%		%		%		%
○ 사 업 량	천ha							
	235	100	126	53.6	5	2.1	104	44.3
	- 지표 배수	188	100	123	65.4	5	2.7	60
- 지하 배수	47	100	3	6.4	-	-	44	93.6
○ 사 업 비	억원							
	46,000	100	20,426	44.4	2,167	4.7	23,407	50.9

(7)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한해상습농경지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있다.

2003년까지 총논면적 1,138천ha중 880천ha가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는 수리답으로 조성되었으나, 수리답이라도 웬만한 가뭄(10년빈도)에 견딜 수 있는 논면적은 434ha (총논면적대비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3년까지 전체는 목표면적 1,100천ha중 900천ha 82%를 수리답으로 조성하고자 추진중이다.

2004년도에는 3,341억원을 투자하여 56천ha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 4.0천ha를 완공할 계획에 있고 연차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총논면적	목 표	2003년까지	2004년계획	2005년이후
1,138천ha	1,100	880	4	216

(8)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규모화·집단화된 새로운 간척농지를 창출함과 아울러, 육상운송거리 단축에 의한 교통환경개선·종합관광권 형성 등 지역경제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행중인 지구는 새만금을 비롯한 7개 지구, 122천ha로 2003년까지 43%(28,098억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도에는 3,198억원(국고 908억원, 농지관리기금 2,285억원)을 투자하여 투자율을 48%로 제고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지 구 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 사업비			사업기간
			2003년까지	2004년계획	2005년이후	
계(7지구)	121,560	64,742	28,098	3,198	33,446	
미 호 천(Ⅱ)	4,430	2,912	2,010	170	732	1989~2005
금 강(Ⅱ)	43,000	6,493	2,994	395	3,104	1989~2006
홍 보	8,100	3,338	2,092	193	1,053	1991~2005
영산강(Ⅲ-1)	13,160	7,039	3,186	430	3,423	1985~2006
영산강(Ⅲ-2)	7,840	3,903	1,593	270	2,040	1989~2007
새 만 금	28,300	33,666	15,883	1,600	16,183	1991~2011
영 산 강(Ⅳ)	16,730	7,391	340	140	6,911	2001~2007

(9)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은 전국 연안 자연부락 단위인 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항포구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시설하여 어촌 지역의 교통, 상권, 물류, 관광 등의 종합적인 기능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가장 큰 재산인 어선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5,432억원을 투자,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사업에 선착장·물양장 등 어선계류시설을 포함하여 2003년까지 전국 130개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내의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등에 4,04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25개 권역내에 504억원을 투입하여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등을 추진중에 있다.

나. 농업의 기계화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가) 추진배경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업기계화촉진 시책에 따라 부족한 농업노동력 문제해소,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가격·유통 등 공급문제, 농기계산업 구조의 경쟁력 약화, 농기계 사후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 기계화촉진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나타나 21세기 농정여건에 걸맞게 농업기계화정책의 중장기계획의 기본틀을 새로이 하고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여건의 변화와 개방화에 대응,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마련한 농업기계화정책 제도개선 방안의 실천 및 농업인의 편의 및 농기계이용률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기계화정책 제도개선

정책자금의 효율성제고와 농업인의 적정한 농기계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는 2,000만원이상의 농기계 구입지원은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행정구역 중심의 5단계로 되어 있는 소규모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A/S능력 향상을 위하여 종합화,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한 A/S능력 중심의 대·중·소형 3등급으로 조정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2004.11.18) 하였다.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율제고와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2004년도에 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유통의 효율화 및 중고농기계 거래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S실태 종합평가제를 계속 추진하여 농기계 수리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2004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제도의 기본을 유지(지원대상자, 지원대상 농기계, 공급자의 기준, 신기술농기계와 발작물·축산전용 농기계에 대한 우대지원 등)하면서, 쌀전업농과 고품질벼 생산농가(친환경농업육성법상 친환경농산물인증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쌀품질인증을 3,300㎡이상 받은 농업인)가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70%에서 90%해당액까지 우대 지원하여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화를 촉진하고 고품질벼 생산을 유도하였다. 또한 기술개발·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농기계와 기본성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10%이상 인하한 경제형 농기계에 대하여는 융자한도액을 20% 상향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완화와 국산농기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였다.

2004년도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2,750억원(국고융자 550, 농협융자 1,375, 자부담 825)으로 49.4천대분의 농기계구입자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 공급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완화에 노력하였다.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가)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2004년에는 120억원의 수리용부품 자금을 지원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수리점 등 면단위 사후봉사사업소에 대하여도 고장 농기계 운반용 차량구입비 뿐만 아니라 수리·정비용 건축비 등 사후봉사사업소의 시설현대화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수리용 부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와 대리점 사이의 전산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S실태 종합평가제(연 2회)를 계속 추진하여 사후봉사 실태가 부실한 제조업체와 사후봉사사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제외 또는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지원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사후봉사 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B/S(사전서비스)실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주관 하에 사후봉사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지역순회수리봉사반을 편성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수리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기사와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 운전요원 4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계화영농사를 900명 양성하는 등 132천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율 증진을 위해 일반농가보관창고 80개소를 설치지원하였으며, 설치비의 70%를 융자지원하였다.

(다)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 촉진

중고농기계 거래시장은 중고농기계 적정판매가격 산정이나 품질보증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2002년에는 우선 농협으로 하여금 8개소의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전시판매장 설치 및 수리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개소당 사업비 1억원의 50%인 5천만원까지 보조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중고농기계거래업소,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를 대상으로 12개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원의 50%인 5천만원까지 보조지원(국고보조 25%, 지방비보조 25) 하였다. 또한, 내용연수를 경과한 중고농기계에 대하여도 3년이내의 기간동안 구입자금을 융자지원토록 하였으며, 기 지원한 20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에 따라 중고농기계의 융자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4) 농기계 생산지원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신기술농기계공급 촉진과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를 위하여 2004부터는 농업종합자금에서 10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중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지원에 9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농업 기자재 생산지원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은 연리 4%,

용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며, 시설농업기자재지원은 연리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최근 2년간 매출실적, 국산화율, 수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출지원 하였으며, 금년도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지원은 17개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시설농업기자재자금은 3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2004년도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휘발유 160,800kl, 실내등유 500,900kl, 보일러등유
2,500kl, 경유 2,254,400kl, 중유 102,200kl, 윤활유 7,100kl, LPG 2,900톤 등 총
3,038,000kl의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의 공급 한도량을 배정받아 유종별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지역조합별로 배정·한도 범위내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였다. 이에 따른
2004년도 면세액 추정은 1,217,471백만원에 이르며, 세부적인 면세내역은 부가가치세
10%, 교통세는 유종별 리터당 휘발유 545원, 경유 287원, 특별소비세는 등유 154원,
중유 11원, LPG 40원이고, 교육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15%이며, 등유
는 특별소비세의 15%이다. 주행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21.5%이며, 판
매부과금은 등유에 한하여 리터당 23원이다.

또한, 면세유 공급시한이 2005.12.31일까지 되어 있으나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농가가 생산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관 처리
하는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촌노동력을 절감하고, 쌀의 생산
비와 유통비용을 낮추며, 고품질의 지역 특산미를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수확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저장하여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
진하고 있다.

RPC에서 산물상태로 일관처리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총 8,101억원(국고보조 2,558, 국고융자 2,358, 지방비 97, 자부담 3,088)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328개소의 신규 RPC를 설치하였다.

가공시설능력이 충분함에 따라 1999년 이후 가공시설 지원을 중단하고, 2002년부터 신규 RPC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건조·저장시설은 2003년까지 568개소를 설치하였다.

앞으로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40개소(480만석)의 추가 설치하여 수확기 유통량의 70%수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WTO/DDA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등으로 시장개방폭이 확대될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2004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편해서 우선,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함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RPC간 통·폐합을 통한 책임경영체계 구축으로 경영효율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통합 RPC에 대해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단위 : 개소, 억원)

	1991년~2003년	2004년	2005년~2013년	계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328개소 (568개소)	0 (80)	- (660)	328 (1,308)
총 사업비	8,101억원	360	3,630	12,091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 등의 영향에 따라 풍·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받기반

정비, 관수시설의 확보, 비가림시설, 공동육묘장 설치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의 생력화와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온실의 표준화 및 시설자재 국산화로 설치단가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며,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생산기반의 구축과 인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농림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고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여 파종·수확 등 전작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축산시설 현대화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게 시설 및 자동화기계 등의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자동화·현대화된 사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료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섬유질 및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2002년까지 총 9개소를 건설·운영중이다. 가축계열화사업을 통해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축산부문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자동화 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가.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최근 식품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참여도의 확대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편의성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은 농업 후방관련산업으로서 농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급절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03년말까지 2,91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에 1,101개소의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6,763억원, 농어촌 유희인력 고용은 약 7,621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5인이상 농가공동체, 주류제조면허 추천·명인 지정업체, 일반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2004년도에는 농업종합자금으로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경기침체로 제조업 전체가 위축되고 식품 소비침체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농산물가공업체도 부도 등 일부 경영부실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영세·한계업체 219개소 퇴출로 전체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시설비 지원에서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나. 종자산업의 육성

1997년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과 21세기 주요산업으로 생물산업의 부상 등 종자산업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자수급의 안정도모와 신품종육성 등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육성대책을 추진중이다.

채소부문의 종자업체는 2004년말 현재 90여 업체이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품종육종기술 수준이 낮고 경영규모 등이 영세한 편이므로 이들 종자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체별로 지정된 전문작물 중심으로 품종육성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보다 유리한 지원조건(금리 4% → 3%)으로 농업종합자금제에 전환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우량종자개발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1995~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이후
지원금액	15,057	2,380	2,965	2,280	1,935	1,983	종합자금제 전환

무, 배추, 고추 등의 세계적인 품종육종 기술을 활용하고 협소한 국내 종자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종자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03년도 수출실적은 16,350천불로 1997년 대비 33.5%증가하였다.

새로 개발된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품종육성자의 신품종육성의욕을 고취하고자 품종보호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중이며, 품종보호제도 시행 당시 27개 품종보호대상작물을 2004년 현재 155개 작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2009년까지 모든 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2002. 1)하였으며, 앞으로 국내 신품종의 국외 보호와 품종육성자에게 외국의 품종 육성관련 정보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식품종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보존유전자원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중이다.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요

농림업분야의 기술은 타분야와 달리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이 농림업과 관련한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점차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술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 기초식량의 자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21세기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9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사업과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기술개발사업은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타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과제와 국가정책 목표달성 및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긴요한 중점기술 및 품목별 일관기술 연구를 위한 기획연구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은 영농·영림 현장에서 재배, 사양, 생산기반, 기계, 시설, 유통, 가공, 생활, 환경, 정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로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며 농림업의 소득증대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현장애로 기술과제와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농업인 개발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연구개발 추진현황

2003년말 현재 총 3,00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과제가 1,669건, 첨단 기술개발사업과제가 1,209건,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제가 127건이다.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 중 현장애로 기술과제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814건이 선정되었으며, 농업인개발과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855과제가 선정되었다.

첨단기술개발사업 중 첨단기술과제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1,127건이 선정되었으며, 기획연구과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82과제가 선정되었다.

한편 벤처형 중소기업 개발과제는 1998년부터 127건이 선정되었다.

<농림기술개발과제 현황>

구 분	연 구 과 제			
	선 정	계 속	완 료	기타(협약해약, 중단 등)
현 장애로 기술과제	814	110	674	30
첨 단 기 술 과 제	1,127	359	743	25
기 획 연 구 과 제	82	28	54	-
농 업 인 개 발 과 제	855	141	692	22
벤처형중소기업개발과제	127	49	60	18
계	3,005	687	2,223	95

2003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2,223개 과제로 이중 423개 과제는 산업체 및 농가에 이전되었고, 802개 과제는 산업체에 이전 추진중에 있으며, 998개 과제는 현장적용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산업재산권 1,851건,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12,259편으로 이들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계약을 체결한 우수 기술개발 과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4년도에는 현장애로기술과 첨단신기술을 중심으로 314개 과제를 신규지원할 계획이며, 2005년도부터 기술수요자 중심형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업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체 기술이전우수과제 내역>

연구성과 (제품명)	제 품 설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관 (생산업체)	경 제 적 효 과
건강홍미	홍국균을 이용한 쌀로 고혈압예방, 혈압강화 등 심혈관계질환에 효과있는 쌀	223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주)제네티카	○2001년 1월 제품생산 ○2001년 현재 1억원 매출 ○2001년도 3억원 매출예상 ○2002년도 이후 연간 약 20~30억원 매출예상
씻어내온쌀	알칼리 이온수로 씻은 뒤 급속 건조시킨 쌀 (쌀벌레, 곰팡이, 변패없음)	779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주)라이스텍	○2000년 12월 제품생산 ○2001년 현재 7억원 매출 ○2001년도 40억원 매출예상 ○2002년도 65억, 2003년 115억원 매출예상
양과음료	양파를 원료로 한 식이섬유, 비타민 등이 강화된 양과음료	80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현대영농조합법인)	○1998년부터 제품생산 ○2000년도 추가기술이전 ○2000년까지 국내매출 32.5억원 수출 20만불 ○2001년 이후 100억원 매출 70만불 수출예상

연구성과 (제품명)	제 품 설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관 (생산업체)	경 제 적 효 과
해파칸	헛개나무로부터 간질환치 료제 및 숙취해소제개발	298	임업연구원 ((주)생명의나무)	○ 2003년 의약품 개발 ○ 시장규모 국내1천억, 해외10억불 ○ 국내 숙취해소시장 약600억원
에코바이오	퇴비 부숙촉진 하는 약취 저감미생물로 축산분뇨처리	105	축산기술연구소 ((주)우진B&G)	○ 2001년 5월 생산 ○ 2001년 현재 1.2억원 매출 ○ 2002년 이후 연간 50억원 매출
녹차음료	녹차를 이용하여 음료개발	99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보성녹차)	○ 1998년부터 제품생산 ○ 1998년 국내매출 10억원 ○ 1999년 37억원 ○ 2000년 39억원 매출
JBB-1 (NG5006)	감귤껍질에서 추출한 물 질로 심혈관질환, 고지혈 증 및 동맥경화 예방	439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주)바이오맥스)	○ 2002년 현재 11.5억매출, 850만불 수출 ○ 2003년 이후 115억 매출예상 (1400만불 수출예상)

나.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 요

수산업을 21세기 종합해양 과학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1999년) 및 농특세(1994년)를 재원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발족으로 수산 부문 기술개발사업을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과 수산기술개발사업으로 대분하며, 수산기술개발사업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과제현황

지금까지 총 374개 과제를 선정하여 297개 과제는 종료되었고, 77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2003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297개 과제중 29개 과제가 산업체에 기술

이전되었고, 56개 과제는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136개 과제는 어업인 기술지도에 활용되고 있고, 100건은 특허출원하는 등 연구성과가 어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2001년에 수립된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을 기초로 하여 2004년 농림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을 수립(2003.12)·시행하고 있다.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수요자의 정보화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을 보완하고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사각지대 해소와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내실화 및 정보컨텐츠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일반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중통신망 구축은 민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가 경제성이 있는 대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에 따라 2005년까지 전국 어디서라도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에서는 도·농간의 정보통신기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여온 결과, 2003년말 전국의 농어촌지역 가구의 93%가 초고속통신서비스(ADSL)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산간·오지 지역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각종 장비개발을 추진중에 있다.(2004년 정보화촉진기금 700억원)

또한, 농업인의 정보이용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농간, 산업간 정보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 농협 등과 공동으로 농촌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인 디지털 사랑방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PC보내기 운동」은 지자체와 민간기업간 자매결연맺기, 출향인사등의 PC기증, 농촌정보화 캠페인 전개 등으로 농가PC 보급을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교육기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PC의 성능을 향상시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업인이 영농경영에 필요한 기술·유통·출하정보 등을 활용토록 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성능 좋은 중고PC 확보가 어렵고, 농민들도 중고PC보급 받기를 꺼려하여 우리부에서는 2004년까지만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는 새PC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농협 등에서는 중고PC 보내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사업」은 농업농촌 정보화 확산 및 이용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마을단위로 PC 5대, 프린터 1대, 위성TV 1대 등 시설설치 및 마을홈페이지 구축으로 마을주민들의 정보화교육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4년에는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농업·농촌정보화 허브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2)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고 정보화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까지 정보화 취약계층 농업인 40만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연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중 10만명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장부작성, 전자상거래 활용 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중에 있다.

정보화 교육은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의 사정을 감안해 주로 현장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화만 하면 인근 관내 대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주는 '농업정보119서

비스를 전국 22개 농업계 대학에서 실시하여 농업인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컴퓨터 등 교육 장비를 탑재한 특장차 버스를 이용하여,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고 농업인 대상 정보화교육이 가능하며 농업·농촌 정보화를 선도할 열의가 있는 자를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로 선정하여 인근 마을의 농업인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장방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집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의 지역농협등은 인터넷·컴퓨터 활용교육, 농업정보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국 22개 농업계 대학 등에서는 농업용S/W활용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발굴·보급, 정보경진대회와 농업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 인쇄매체(팜플렛, 농업정보 소식지 등)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3)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인터넷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실제경영에 도움되도록 관련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은 여러 기관에 산재해있는 농업정보 중 실질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제공하는 포털시스템이다. 지난 1994년부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PC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2000년에는 인터넷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품목종합정보, 농업뉴스, 생활·문화·교육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림수산정보망은 텍스트 위주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확대하고, 품목중심의 사이트

개편, 농업인 성공사례 등 앞서가는 농업인 소개코너 운영, 우수 동호회지원 등으로 잠재고객과 휴면회원의 활동재개 등으로 일평균 접속건수가 2002년 52천건에서 2003년 176천건으로(241%↑) 증가하는 등 방문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콘텐츠 제공이 미흡한 편이다.

2004년에는 수확후 기술, 수출입, 기상 등 농업콘텐츠를 추가하고 (주)대교를 통해 유아, 초등학생용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품목 동호회를 집중육성하고 동영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www.chulha.net)」은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시 필요로 하는 시장가격, 출하상황, 가격전망 등 유통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여 언제 어느 시장에 얼마만큼 출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가격등락이 심한 주요 채소류 5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하여 2000년부터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4년 현재에는 도매시장 주요거래 44품목(무·배추·고추·마늘·양파·오이·상추·사과·장미·한우·돼지·호박·파·당근·수박·참외·토마토·단감·감자·배·감귤·육계·계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하지원시스템(www.chulha.net)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요 정보 내용으로는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시장별·법인별·가격대별 출하물량을 분석한 정보와 집중출하시기의 가격·거래물량·가격변화 등의 분석정보가 각종 그래프와 함께 제공된다. 현재의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가격전망에 대해서도 품목별로 전문가를 지정·운영하여(현재 100명) 매일 주기적으로 전화인터뷰, 게시판 등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공하는 등 주간 핵심요약정보와 빠른가격조회 등으로 이용자가 보다 빠르게 품목별 출하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보다 현장감 있는 정보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대상 품목 확대(2005년까지 91품목 확대), 전문가인력풀 운영내실화, 정보제공매체 다양화(유무선

인터넷,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의 시장교섭력증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정보화마인드 구축을 위하여 우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추진해온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03년까지 1,506농가 지원에 이어 2004년에는 200농가 홈페이지를 신규구축 추진중이다.

아울러 (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정기적인 홈페이지 농가 평가관리를 통하여 부진농가는 통합 쇼핑몰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화관리를 하였으며,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4) 농림지식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은 농림부와 관련기관이 축적하고 있는 정보나 노하우, 경험, 아이디어 등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직원과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0년 구축되었다.

구축이래로 시스템 기능이나 이용도에 있어 타부처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중앙부처 정보화수준평가에서 분야 최고점수를 획득하는 등 정보와 지식습득 및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정착하여 부내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관련 지식은 물론 업무자료, 해외정보, 인물·용어정보, 관련기사 정보 등 폭넓은 비정형적인 콘텐츠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본인의 정보, 어학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의사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농림부와 관련기관을 위한 정보공유코너도 운영중이다.

특히, 2004년에는 페이지 조회나 검색속도를 2배이상 대폭 개선하였고, 농림지식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전자결재, 인사관리, 민원처리, 이메일에 별도 ID와 비밀번호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정책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을 포함한 타기관의 외부공개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관심지식이 등록되었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등 사용자의 편의위주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앞으로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본부뿐만아니라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 지자체를 아우르는 농림관련 종사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호 정보교환, 업무발전을 위한 참여와 토론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서 농업·농촌업무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정책도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5)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우리나라 식물자원의 보전 실태를 정보화하여 지속적인 보전관리와 자원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1998년부터 국가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동 시스템을 확대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국가생물종지식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실적은 1단계(1998)에는 기반구축단계로서 C/S환경의 관리시스템 및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를 개발하였고, 2단계(1999)에는 활용단계로서 웹환경의 인트라넷 정보망 개발 및 보전기관, 식물분류체계, 식물목록, 식물도감 DB를 구축하였다.

3단계(2000~2001)에는 DATA 구축단계로 국립수목원 등 식물보유기관(10개소)의 보유식물 정보화와 대학 등 식물표본관(15개소)별 표본정보의 DB를 구축하였고, 식물 식재위치를 GIS와 연계하여 식물식재지에 대한 결과분석이 가능하도록 GIS응용 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4단계(2002~2003)에는 국가생물종지식DB 구축단계로 12개 대학 및 3개 기관에서 보유한 곤충표본정보 DB를 구축하였고, 동기간에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국가 표준식물목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물종 목록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식물종은 국제생물다양성협약에 의거 우리나라의 식물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5단계(2004)에는 기존에 구축한 식물·곤충 중정보 및 표본정보의 DB 표준화와 각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을 완성하는 단계로서, 미비된 곤충중정보와 자연생태동영상 등 생물정보 DB를 추가 구축하고 도감정보를 재정비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정보시스템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생물자원정보 사업을 통하여 기초과학분야인 식물, 곤충에 대한 분류체계의 정착과 생물종정보에 대한 활용가치를 확산,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열악한 국립수목원의 정보화를 통하여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수목원, 식물원, 대학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어업정보화 촉진

새로운 UN해양법협약에 의한 국제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어업의 어로구역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양식기술정보 활용과 전국도매시장의 시황정보를 보면서 출하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어업부문에든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 산업분야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업부문의 정보화 기반을 크게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어선조업 DB구축과 수산물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어로어업에 필요한 어군정보와 출하에 필요한 시황정보 등을 어업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수산물의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정보통신이 PC통신에서 인터넷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어군정보, 위판 정보, 어업기술정보, 어촌정보등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등재하여 어업관련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 추진

수산물은 복잡 다기한 유통절차를 거쳐 소비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산물 유통정보 제공기반의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수산물 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유통주체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종사자와 소비자들이 쉽게 수산물 유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수산물 유통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정부예산, 정보화촉진기금 및 유통주체 부담금 등 5,300백 만원을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정보’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산지수협 등 73개소에 대한 위판정보 및 조합업무전산화를 하였으며,

11개 수산부류도매시장에 대한 경락정보 DB화, 3개 도매시장에 대한 무선응찰방식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협중앙회에 대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2003년에는 97개 일선수협중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25개 조합의 유통정보화 추진하여 동 5개년 사업의 마무리를 하였으며,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확대를 위해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을 추진하여 200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수출입통계DB를 구축하여 수산물유통정보를 유통종사자, 어업인 및 소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가. 수출진흥 대책

(1) 농산물수출 현황

농산물수출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임과 동시에 WTO체제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구조개선 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되며, 우리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표준화 등 유통시스템개선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의 바로 이웃에는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시장인 일본과 거대 시장으로 등장한 중국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증대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년도(2000~2003년)의 농산물 수출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0년 3월과 2002년 5월에 발생한 구제역 영향으로 농산물 수출의 20%를 차지하던 돼지고기 수출이 차질을 빚어 축산물 수출이 계속 감소하였으나 화훼, 채소, 과실류 등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수출농업인의 수출마인드 향상과 정부에서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과 홍보로 평가되며 중장기적인 수출농업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최근년도의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1997	2002	2003	증감률(%)
(전체 농림축산물)	1,759.2	1,639.9	1,859.8	13.4
○ 신선 농 림 축 산 물	615.7	459.3	507.5	10.5
- 김 치	39.7	79.3	93.2	17.5
- 돼 지 고 기	242.3	22.2	31.3	40.8
- 채 소	38.4	89.5	100.6	12.5
- 화 훼	5.3	32.1	45.3	41.0
○ 가 공 농 림 축 산 물	1,143.5	1,180.6	1,352.3	14.5

한편, 수출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포장, 예냉 검사 등 일관 수출체계를 갖추고 있는 광양수출물류센타를 운영(2004. 5월)중이며 마

산은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농산물의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재정비하여 수출농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2) 그간의 수출농업 육성시책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농업의 육성시책을 대별하면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구축』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들 수 있다.

국내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첫째, 전문생산단지를 1997년의 28개 단지에서 2004년 9월말현재 108개 단지로 확대 지정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를 확보하였으며,

둘째, 수출컨설팅도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395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생산 및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WTO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수출물류비의 지원을 1997년 54억원에서 2004년에는 289억원으로 확대하고, 1997년 2,414억원 수준이던 수출자금융자규모도 2004년에는 4,6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출관련 경영체의 자금부담을 크게 완화토록 하였다.

넷째, 국내외 수출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5개국 8개 농업무역관(KATIC)과 21개국 71명의 모니터로부터 입수되는 수출관련정보를 인터넷정보망인 KATI와 FAX신문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확대(1997년 11회 → 2003년 23회)하여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바이어의 발굴, 현지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개발 등의 기회로 활용해오고 있다.

한국산 농산물의 세계브랜드화를 위해 수출농산물공동대표브랜드(Whimori) 사업

을 추진하고 종래의 라디오와 빌보드 위주의 단편적인 홍보에서 현지TV와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JUSCO등 해외의 대형유통업체와의 특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식품의 홍보 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의 농산물 수출은 수출 상대국의 식품안전 규제 및 수입검역 강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의 시장경쟁 심화 등 수출애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 회복, 2002년 한·일 월드컵에 힘입은 우리나라 인지도 제고, 건강 식품으로의 김치에 대한 관심 증가,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의 적극추진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지원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계	27,521	35,300	36,164	35,415	39,655
□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8,440	9,345	9,559	9,994	10,773
○ 국제농산물박람회	3,011	3,108	3,542	4,098	3,953
○ 수출활성화사업	853	1,025	879	1,100	1,045
○ 현지유통업체직수출	346	697	947	1,000	1,430
○ 수출홍보사업	3,429	3,458	3,250	2,755	3,195
○ 해외시장정보사업	801	1,057	941	1,041	1,150
□ 농축산물 판매촉진	19,081	25,955	26,605	25,421	28,882
(수출자금융자)	(4,135억원)	(4,043억원)	(4,596억원)	(4,526억원)	(4,639억원)

금년도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한 1,674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과실·화훼·김치 등의 신선농산물과 목재류 등 가공식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8월까지 농산물 수출동향>

(단위 : 백만\$, %)

구 분	1999	2000	2001	1~8월		
				2003	2004	증감률
농 립 축 산 물 합 계	1,679.8	1,531.9	1,579.9	1,094.7	1,274.6	16.4
○ 신 선 농 립 축 산 물	791.3	550.0	521.0	243.9	269.1	10.3
○ 가 공 농 립 축 산 물	888.5	981.9	1,058.9	859.8	1,005.5	18.2

(3)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금년도 수산물 수출은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어종의 국내 생산저조, 저가 중국산 수산물 수출공세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첫째, 수출주력시장인 일본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한·일수산물교역실무회의를 통하여 일본의 수입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패류의 대일 수출시 패류독소에 대한 통관검사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원활한 수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둘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참가 및 수산물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우리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수출상담을 통하여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수출증대를 도모하였다.

셋째, 우리수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코자 국내외에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다.

이와같이, 우리수산물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 우리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하여 시장다변화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대한 교섭 강화 등 교역장애 해소를 위한 통상협력도 강화하여 해외에서 우리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나. 수입관리대책

(1)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을 연차적으로 관세화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질서의 유지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63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은 별도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지정기관배정방식, 수입권공매방식, 실수요자배정방식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17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는 지정기관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밤, 대추 등 6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권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옥수수, 대두 등 40개 품목그룹은 국내 수요자가 과거의 수입실적 등에 따라 수입권을 배정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요자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기관배정방식 운용과정에서 생긴 판매이익금과 수입권공매방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은 1988~19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국내여건 변화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여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증량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품목은 사료용 원료인 옥수수, 보조사료, 사료용근채류 등과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원료농산물인 대두, 팥 등 14개 품목이다.

(2) 관련법상의 각종 제도의 활용

(가) 할당관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용 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옥수수, 밀, 근채류, 요소, 농약원제 등 25개 품목이다.

(나) 조정관세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2004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찹쌀, 바나나, 메주 등 7개 품목이며, 메주(25% → 22), 표고버섯(55% → 50) 등은 축소 적용하였다.

(다)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UR 협정상 관세화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4년 9월말 현재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은 녹두, 팥, 대두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라)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

수입개방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중국 한시적 세이프가드조치(TSG)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른 예외적인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였다.

(3) 농축산물 밀수근절대책 추진

국내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밀반입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조 아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깨, 콩나물콩 등 18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관세청과 협조하여 기준신고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게 신고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단속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요원(390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산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산 농산물의 휴대품 과다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휴대농산물의 면세 한도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였으며(80kg → 50, 2000.10), 2002년 1월부터 품목별 반입한도량(5kg, 잣 1kg, 쇠고기 10kg, 한약재 3kg)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휴대품 통관고시를 개정하여 반입물량 축소 및 반송절차를 강화하였다.

(4) 수산물 수입관리대책

1997년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저가의 외국산 수산물 특히 중국산 수산물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생산어업인 보호 및 수산업기반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첫째,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저가 및 저질 수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돔, 냉동낙지, 새우젓, 활뱀장어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가·종량세(선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WTO/DDA 및 FTA협상 등에서 무세화 또는 관세의 대폭적 인하가 논의 중이고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조정관세 철폐,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등 조정관세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내 수산업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수산자원의 부존상태에 따라 국내 생산량 등과 연계하여 국내생산실적, 수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물량까지는 저율의 관세 부과, 일정기준 이상 수입량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관리하는 할당관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셋째,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1년 4월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체결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등록된 가공공장에서 생산되고, 위생안전을 보증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수산물에 한해서 수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국산 불량수산물의 수입이 완전히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산 활수산생물의 국내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말까지 「한·중 활어위생약정」을 체결, 활수산생물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어류질병 감염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붕어, 잉어 등 낚시터에 방류하는 어종에 대하여도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통관전에 질병감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기준규격을 설정함은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제도 강화차원에서 2001년 2월부터는 선도보장이 가능한 냉동품, 염장품, 건제품 등은 정밀검사후 통관토록 하고,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당국가·해당품목에 대하여는 선통관을 금지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0월부터는 횃감용 수산물에 대하여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급제,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 및 불법 위장수산물의 수입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 친환경농업의 육성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 농업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개방화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그간 증산위주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의 환경정화기능을 극대화하고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축하여 우리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 중장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년 1월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산림환경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Codex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제교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1월 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5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선진국 기준의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육성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4년 4월에는 그간의 친환경농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는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중을 10% 수준까지 올리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현재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와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농업환경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및 농약빈병·폐비닐·폐농기계와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데, 농사 중 발생하는 오염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우리나라 전체사용량은 1991년 27천톤으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모든 농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독시키고 농작물과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해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개발·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 농약절감형 재배 기술지도, 천적이용 등 병해충종합방제 체제 구축과 함께 미생물농약, 식물성농약 등 저독성농약을 개발·보급 중이다.

벼농사는 농약 사용량이 많이 줄고 있으나 시설원예의 농약사용량이 많이 증가하여 2005년부터는 시설원예의 농약에 의한 방제를 천적방제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천적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1999년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 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

고 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는 잉여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2013년까지 40% 비료사용량 감축을 목표로 작물양분종합관리(INM)실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토양정밀검정에 따른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주문형 배합비료, 축분퇴비 등 환경친화형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2005.7.1부터 완전 폐지를 목표로 2003.10.16일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어 비료사용량 감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 발생량은 우리나라의 축종별 사육두수(2002.12)를 기준으로 연간 약 49백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규제대상 농가는 농가자체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퇴비·액비로 자원화 하거나 정화 방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아닌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공동수거·정화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2002년말 기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는 총 58.9천 농가로 97.6%인 57.5천 농가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처리시설중 92%가 순수자원화시설, 5%는 퇴비화 및 정화 시설, 3%는 순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가축분뇨는 2010년까지 전량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거나 정화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4)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농기계 보유대수는 2002년말 현재 3,415천대로서 이 중 약 0.5%인 18천대정도가

폐농기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28%를 수거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이다.

이러한 폐농기계를 수거, 해체, 압착할 수 있도록 폐농기계처리장 설치를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지원하여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에서 “폐농기계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폐농기계처리장에서 수거·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폐농기계 수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폐농기계 수거 캠페인을 정례화 하는 한편, 시장·군수가 마련한 장소이외에 폐농기계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2003년 각각 59백만개, 257천여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환경부 산하 환경자원공사를 통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실적이 59~66% 수준으로 이로인해 농촌환경이 오염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과 11월을 중점 수집기간으로 정하여 일제수집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집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2004년에는 수거되는 폐비닐 85천톤에 대하여 전액 보조로 정액지원(30원/kg)을 하고 있다.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이 산성인데다 화학비료에 과다 의존하여 농작물이 재배됨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하천·호수의 부영양화, 축산분뇨 등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용수의 수질도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토양개량제 시용, 객토사업 및 농업용수 수질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토양개량사업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다.

19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부터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규산, 석회 각각 4년 1주기로 공급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2) 객토사업

사질토 등과 같은 생산성이 낮은 토양과 휴·폐광산 인근의 오염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한 객토사업은 2003년까지는 3년 상환의 국고융자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2004년부터는 농업종합자금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객토를 희망하는 농가는 필요한 금액만큼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추이를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전국 저수지 18천개소에 대한 수질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수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시설과 규모가 비교적 큰 주요 농업용수원에 대하여는 수질측정망을 설치하고 연2~4회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측정망은 1998년에 200지점, 1999년에 350지점, 2000년에 450지점, 2001~2003년에는 500지점을 선정·운영하는 등 수질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수질조사결과는 환경부, 시·도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저수지 주변 청소, 주민홍보 등을 통한 수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중, 수질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자연정화기법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4개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이 중 3개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를 완료하였다. 2001~2003년에 전남 무안군 감돈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확대하는 한편, 농업용수 수질개선 공법개발 등 연구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1)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2002년부터 사업내용이 유사한 종전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규모에 따라 소규모, 대규모 지구로 구분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소규모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사업 규모와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도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그간 지구조성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1,000ha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5년에 조사설계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가) 소규모지구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중산간지의 중소규모의 가족농들이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면서, 토양과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착미생물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지당 2억5천만원씩, 총 2,500억원을 투자하여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0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까지 1,405억원을 투자하여 562개 단지를 조성하였다.

(나) 대규모지구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지구당 10~20억원씩, 총 3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2003년까지 590억원을 투자하여 49개 지구를 조성 완료하였다.

(2)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

벼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과 화학비료 등 오염원을 줄여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안전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매년 7억원을 투자하여 16개소의 친환경농업마을을 선정하고 2001년까지 3년간 계속 지원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6억원을 투자하여 18개 마을을 조성중에 있다.

사업내용은 벼 재배에 있어 친환경농업의 핵심기술인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INM)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통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1999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나 2002년도부터

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과 명확히 차별화하고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유기·전환기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400ha을 대상으로 매년 5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5,274ha에 3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10,459ha을 대상으로 30억원, 2004년에는 약 12,800ha, 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유통시설 확충, 구매자금 지원, 품질인증 확대 등 판매지원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전문판매코너 127개소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2005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수매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0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200억원을 지원하고, 이 밖에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 우수 인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포장개선 사업비로 49억원을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생산·유통 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유통시설

의 확충, 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확대, 소비자의 현장체험기회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7. 농어가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가. 직불제 확충으로 농가소득안정

(1)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추진

(가) 도입배경

최근 연속되는 풍작과 MMA 수입량의 증가 등으로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국민의 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쌀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으로 그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공급과잉과 정부수매물량의 감소, 정부역할의 축소, WTO/DDA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쌀값은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위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에서는 2002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쌀산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산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농특위에서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지금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고 수급균형을 도모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쌀값하락 및 쌀농가소득의 감소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마련토록 하였다. 연구

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특위의 쌀소위,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10월 22일 명목조수입 하락액의 80%를 보전하기로 하는 등 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년산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 일단 정부안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200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9월 30일 마련하였다. 시행지침은 동 제도가 수확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농업인들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산에 대한 약정체결이 10월 15일부터 이루어졌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예산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2003년도 정부예산안에 500억원이 반영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은 농업인의 가입정도, 쌀가격 하락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등 사전에 소요를 예측하기 불가능함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 기금에는 정부출연금 및 농업인 납부금이 적립되게 된다.

2003년도 쌀소득보전기금에 2002년산 쌀소득보전금 2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확기(2002.10.1~2003.1.31) 쌀값 안정으로 2002년 약정체결결과 171천농가(161천ha)가 참여하였으나 기준가격(150,519원/80kg) 보다 수확기 쌀 가격이 높아(154,092원/80kg)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2002년도는 산지 수확기 쌀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10월 이후에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2003년도에는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부담금(700원/ha)만 납부하고 재약정체결토록 하였다. 그러나 쌀값이 계속 안정 추세에 있고, 쌀값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등으로 2003년도 농업인들의 약정체결 실적은 전년도 수준인 168천농가(160천ha)가 참가하였다.

(다) 사업시행

2003년산 쌀소득보전금 예산은 95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당해연도 수확기(2003.10.1~2004.1.31) 평균쌀값(157,696원/80kg)이 기준가격(152,306원/80kg)에 비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소득보전금이 지급하지 못했다.

2002년산에 이어 2003년산에 대한 소득보전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2004년산에 연속 가입하는 농업인의 납부금의 합리적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농업인 부담금(보험금 성격)을 신규가입자(48,440원/ha)의 1/5수준(9,680원/80kg)으로 경감토록 개선하였다.

2004년산에 대한 농업인의 가입상황을 살펴보면 131천농가(138천ha)로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이후 산지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되어 농업인의 기대와는 달리 소득보전금이 지급되지 못한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앞으로 목표 가격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체제를 전면 개편해 나가고 있다.

(2) 논농업직불제 제도개선 추진

(가) 2003년도 사업평가

논농업직불제는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단체의 노력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제도도입에 따라 논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농업인·소비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WTO체제하에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직접지불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된다.

논직불제는 논외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 영농실천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후 적격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대상 농지(논)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논)로서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논)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실경작자)으로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3월말까지 지급신청을 하고, 시·군 및 읍·면에서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확인후 이행점검기관(농업기반공사,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급

요건 이행점검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논직불 보조금은 2001년에는 1,023천명에 816천ha를, 2002년에 1,050천명에 852천ha, 2003년에는 1,048천명, 910천ha를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2004년에는 1,056천농가, 955천ha에 4,783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2년에는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40만원으로 전년 보다 2배 인상하였고, 논외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 중 담수의무를 해제하고 논에 벼 이외 채소, 콩, 사료작물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논외 기능유지가 어려운 과수, 관상수, 약용작물 등 영년생 작물은 계속하여 제외하고 있다. 토양검사는 8,250점에서 61,500점으로 잔류농약검사는 798점에서 2,250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농기장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농가의 화학비료, 농약사용량 기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영농실천 의무를 강화하였다. 한편, 논직불제 대상자의 이중·중복선정, 실경작, 필지분할 여부 등에 대한 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003년에는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32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432천원으로 인상하였고, 지급상한도 2ha에서 3ha로 확대하였다. 과수·관상수 등의 묘목도 재배가능 품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친환경영농실천의무 강화를 위해 질소질비료 과다사용 논에 대한 생육기 엽분석 3천점을 실시하고,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점수를 2,250점에서 4,500점으로 확대하였다.

(나) 2004년도 중점 추진개요

2001년 도입된 논직불제는 논외 형상과 다원적 기능유지, 친환경 영농실천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로 친환경 영농의무 부과 등 친환경직불제 성격으로 운영(WTO 협정상 환경보전직불로 분류)하고 있다. 친환경

직불로 운용할 경우 WTO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대상 농가제한 및 단가인상의 어려움으로 쌀재협상 및 DDA이후 농가의 소득안정 장치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논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쌀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쌀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 중이며,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논농업직불제는 소득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 중립적 성격의 고정형직불로 개편할 예정이다.

(3)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예산 58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2004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소, 돼지, 닭을 사육하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을 희망하는 일정규모의 1천여 농가를 엄격히 선정하여 시·군, 축협 등 관계기관과 참여농가의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분 또는 추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가당 직접지불금 1천 3백만원과 인센티브 2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이행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점진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의 경우 초지, 조사료포 확보 등을 통한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유지토록 하고, 돼지·닭은 축산분뇨발생 억제를 위한 사육두수 감축 및 분뇨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참여농가 모두에게 분뇨처리경로 확인, 출하전 항생제 사용금지, 친환경 프로그램 이행기록, 소독시설설치 및 소독실시, 환경교육 이수 등 의무를 부여하고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04년 11월 현재 한육우 129, 젓소 75, 돼지 215, 닭 93 등 총 512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축산직불사업의 축산농가 참여확대를 위해 2004년 8월부터 상시신청 체계로 전환하여 시행중에 있다.

2005년까지 시범사업으로 58억원, 1천농가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지원단가 및 이행요건을 개선하여 2006년에는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

(가) 도입배경

WTO출범이후 수입개방 확대로 산간·오지 등 조건불리지역의 농업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감소가 심화되면서 급속한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은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고 지역 인구유출도 심하여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 단위당 비용이 높고 지역개발정책에서도 우선 순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DDA, 쌀관세화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시 전반적인 농업수익을 감소로 이·탈농 증가 및 휴경지 확대 등 조건불리지역 농촌의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마을의 자발적인 발전계기 마련 등 지역사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EU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본의 중산간지역 직불제 등 선진국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 1975년부터 구조조정 정책의 보완으로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영농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해 2000년부터 중산간지역 직불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건불리직불제 도입은 2001. 3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으로 농업인, 농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2002년 및 2003년 예산의 경우 예산당국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이 농업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비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나, 2004년 예산에서는 FTA비준과 관련 농어민지원예산 추가 반영분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예산 100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향후 조건불리직불제는 2004년~2005년 2년동안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전국적인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 추진과정

2001년 4월 조건불리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한 후, 전문가 토론회, 현장점검, 연구용역 실시 및 경사경사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방향 마련 및 실무대책반 운영(2001.6.2~12.31)
 - 농림부, 농경연, 농진청, 농협, 농기공 참여(11차례 회의 개최)
- 경사도, 표고 등 물리적 조건의 기술적 타당성 조사 실시(2001.5.28~6.1)
 - 강원 홍천, 충북 진천에서 GIS구역도 도면을 통한 경계구분 가능성 조사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정책토론회 개최(충북 2002. 2. 26, 서울 3. 5)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 구역도 제작(2002년 예산 : 15억원)
 - 399개 오지면 내 경사도 조사 및 대상지 구역도 제작(농업기반공사)
- 농경연, 농기공, 지자체 공동으로 3개 사례면에 대한 도상연습 실시(2002.4.15~5.20)
 - 경사도 14%이상의 밭을 대상으로 지번조서 작성, 마을협약, 보조금 신청 등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 실시(2003.4~2004.1)
 - 조건불리지역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등 3건
- 강원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실시(2003년, 도비 3억원)
 - 대상지역 : 삼척시 가곡면, 횡성군 강림면, 인제군 상남면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예산 100억원 확보(예비비, 2004.2.23)
 - 전문가(학계, 연구원, 지자체) 의견수렴(4회: 2004.1.8, 1.15, 3.25, 4.19)
 - 현장 의견수렴(삼척시 농정심의회) 및 현장 적용가능성(삼척시 가곡면) 검토(4.23)를 거쳐 사업시행지침 확정
- 2004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2004. 6월) : 521개 법정리, 32천ha

2001년 3월 이후 농림부는 3차례의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기본추진방향을 수립하고(2001.4.8),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읍·면별 통계자료 수집 등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6.2~12.31). 1,423개 읍·면중 399개 오지면의 밭을 대상으로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농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2002년에 399개 면의 밭경사도 조사 및 대상지 구역도 작성을 완료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구역도를 작성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일부 수치지형도가 미구축된 군사보호구역 등에서는 지자체의 지가전산도면을 활용하였다. 각계 의견을 위해 2002년에는 정책토론회를 농림부, 지자체, 농경연,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충북(2.26)·서울(3.5)에서 개최하였고, 도상연습을 실시(2002.4~6)하여 직불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였다.

2003년에는 조건불리지역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등 3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강원도 지역(3개면)에서 도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다) 향후 추진일정

2006년 전국적인 본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지침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중

합평가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본사업전 지급대상 선정기준인 전국 읍·면의 경지경사도 조사를 200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5) 수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가) 배경 및 추진경위

수산분야의 보조금폐지와 관세인하를 포함하는 WTO 도하개발 아젠다가 2001년 11월 출범함에 따라 향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산자원관리 및 환경친화적 어업 육성 분야 등을 대상으로 직불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나) 시행준비 및 시행과정

농업은 1994년 UR협상 타결이후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2001년부터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수산업은 농업과는 달리 직불제 도입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은 농업분야의 사례를 감안하여 우선분야를 도출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먼저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타당성과 우선시행분야 선정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1년 부터 2003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KMI)에서 수행하였으며, 2004년도 처음으로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어장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방지를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직불제(50억원)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1,15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사용량의 80%까지 확대 전환할 계획이다.

(다) 앞으로 남은 과제

2005년 연근해휴어제 용역(2억원)을 실시 하여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설계와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도입가능한 다른 직불제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나.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농촌에 대한 체험·교류·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관광 수요의 패턴도 동적인 여가활동, 가족단위 여행, 주말을 적극 활용하는 저렴한 체류형 여행 등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도시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도시민의 소득은 높아졌으나 누적되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질은 악화되면서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아늑하고도 고향 같은 여가공간 및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회복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고, 도시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가족단위 체험관광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02년부터 추진해 온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한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교육·홍보, 마을가꾸기경진대회, 포털사이트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공모 방식을 통해서 추진되며, 사업신청마을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현지점검을 통해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한다. 2004년까지 선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76개로 정부가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하여, 주민합의를 거쳐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보강하고 자연경관을 조성하는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수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공모델 창출·홍보를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2002년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3년도에는 농촌관광 마을지도자 과정, 현장전문가 과정, 워크샵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촌관광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농촌관광 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를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여름방학·휴가철을 이용하여 농촌관광 지하철 홍보, 초등학교 교사초청 체험행사, 초등학생 농촌관광 체험기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2003년도에 전개하였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아직 사업시행 초기단계이나 전국에서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면서 도시민 및 농업인, 지자체의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시민 초청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하여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 쌀 전량을 직거래하여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행정과 주민간 일체의 노력 및 기업과의 자매결연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로 성장한 사례도 있다.

건전한 농촌투자 촉진을 위해 2002년 7월부터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설치하여 농촌투자 관련 정보제공·상담·알선, 관련 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 홍보물(비디오, 리플렛) 제작·배부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농촌투자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발굴·개선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추가 구입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4.1.1)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주택을 주말·전원주택 등으로 활용, 상시 거주치 않을 경우 별장으로 간주 지방세(취득세, 종토세 등)를 중과하던 것을 일반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아울러,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코자 별도의 T/F를 구성(2003. 10월)하여 국내외 현장사례 조사, 연구용역, 성공한 마을리더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을 2004.1월에 마련하였으며, 연차별로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차질없이 추진코자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2004년 추가선정된 32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험시설, 휴식처 마련 등 농촌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합동 운영실태 조사, 마을지원팀 구성(도농교류센터내)·운영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중으로, 관련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력육성 대책을 마련키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 인력육성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관광 포털사이트의 정보제공 기능 개선 등 콘텐츠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이며, 도·농교류 촉진 및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하여 농촌문화답사기 공모, 교사초청 체험행사를 실시하였고, 올해의 도농교류상 제정, 농촌관광 박람회, 그린투어 심포지움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농촌투자유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농촌에 내집갓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세법을 개정하여 시행(2004. 1월)중이고, 효율적인 운동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지방조직에 도농교류 전담부서를 설치·운영중이며, 향후 농촌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2년부터 운영중인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도농교류센터로 확대·개편(4.1, 인원 6→14명)하여, 기존의 투자유치 촉진업무 외에 농촌관광마을 실태조사 및 컨설팅 추진, 교육·홍보 및 1사1촌 운동 확산 지원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전담지원토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농업기반공사 9개도본부에 도·농교류 전담부서 및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그리고, 농협, 전경련 등 경제5단체 등이 참여한 「농촌사랑 협력조인식 및 1사1촌 자매결연 발대식」을 지원하였고, 1사1촌 운동과 관련한 정보제공, 우수사례 홍보 등

결연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www.1salchon.com)·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10월말 기준) 985개 기업체와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중에 있다.

1사1촌 운동의 경우, 기업체와 농촌마을이 상생의 원칙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자매결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는 한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도시민, 기업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농촌투자유치 등 도·농교류를 개방화시대에 농촌활력증진과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등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어촌관광 등 소득원 개발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외소득원 개발, 어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1990~1996년까지 67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안정적인 사업의 유도를 위하여 개소당 30억원씩 2개년사업으로 투자하는 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2001년까지 전남 보성군, 신안군 등 2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는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친해양 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4년까지 7개 지역에 개소당 60억원씩 3개년 사업으로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전남 완도(60억원), 경남 거제(60억원), 강원 삼척(60억원) 등 3개지역을 지원 완료하였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 북구(60억원), 경기 안산시(60억원), 경북 영덕군(60억원), 제주 북제주군(60억원) 등 4개 지역에 건립 추진중에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어업여건의 변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어업활동의 장(場)인 어촌을 어업체험, 양식체험, 갯벌체험, 바다 낚시 등 체험 중심의 21세기형 관광어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자원, 산업생산과 연계하여 도시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착문화적, 환경친화적 관광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0개 마을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마을 등 12개소에 60억원(마을당 5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소, 진입도로, 주차장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 주도로 운영하게 하여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는 활기있는 선진 관광어촌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계획이다.

(3)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확대 도모

농촌지역에 농외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높여주고,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1984년부터 농공단지 조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2월말까지 총 315개소의 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이중 297개소의 농공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었고,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에 3,800개의 업체가 입주 가동중이며, 113천명이 취업(현지인 80천명)하여 연간 1조2천억원의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은 고용증대와 생활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외에 단지 조성공사와 공장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촉진, 지역연고기업의 투자 활성화, 서비스업의 발달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 지정 실적>

구 분	합 계	1997년까지	1998년	1999년	2000~2003년
단 지 수(개소)	315	291	3	1	20
연 면 적(천평)	13,947	12,995	294	103	555

(4) 농산물가공·특산품 생산의 활성화

2003년말 현재 농산물가공업체 558개소, 특산단지 665개소가 운영중이며 가공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03년에 6,763억원을 기록하여 IMF직후인 1998년의 5,723억원에 비해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가공산업과 특산품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지원보다는 기존에 운영중인 업체와 단지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내실화하면서 향토성과 지역지명도를 상품화하기 위해 경영지도, 포장디자인 개발,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나갈 예정이다.

다. 농업경영 위험관리 강화

(1) 농작물재해보험제도 확대 시행

(가) 사업실시지역 확대 및 제도개선

2004년도에는 2년간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복숭아·포도·단감·감귤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영비 국고지원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더욱이 농가에서 부담할 운영비 10%

를 농협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농가들은 운영비를 전액지원 받음으로 인해 가입농가도 '03년도 16,522농가보다 50.5% 증가한 24,868농가가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11,008ha)도 59.4% 증가한 17,552ha을 보험에 가입(대상면적 대비 18.2%) 하였다.

○ 2004년 지원계획 : 순보험료 50%, 운영비 90%, 예산액 44,805백만원

또한 향후 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와 민간보험사 참여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재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 신설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내에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및 기금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국가재보험제도 :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수한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보험 책임을 국가에서 인수하는 제도(재보험사업)를 말함. 즉,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와 같은 거대재해 발생시 거대재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국가에서 보장하여 주는 제도임.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F』 구성 및 연구용역 추진

국가재보험 모델 설정, 기금설치, 객관적 손해평가 방법 적립 등 그동안 사업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대학·보험개발원·민간보험사 등 11개 기관의 보험전문가들로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세부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2004.6~2004.11)을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다.

(2)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자연재해 등 가축피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발생시 재생산 기반을 조속히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가축공제는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최근 태풍, 화재, 호우 등의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홍보·농가 안내 등을 강화하고 지원예산도 2003년 대비 34.6% 증가한 14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공제 가입율>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P)
소	6.3	7.0	10.5
돼지	35.4	43.4	44.6
말	0.7	17.4	30.2
닭	8.4	2.1	2.5

* 2004년부터 오리가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음.

2004년에는 공제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닭공제는 오리를 포함한 가금공제로 확대하였고, 벼락으로 인한 전기안전장치의 고장에 따른 폐사공제금 특약을 신설(돼지, 가금)하였다.

(3)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상설화 추진

(가) 추진배경

농업경영이 종래 소규모 가족영농에서 고가의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하였으며, 최근에는 자연재해 등 자연조건의 제약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영상 위험요인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와 반해,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농업특성에 맞는 지원장치가 거의 없어 곧바로 농가부채문제로 귀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즉, 농업경영체들은 가격폭락이나 가축질병 등으로 경영위험에 빠지면 자금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어 그대로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한 경영체가 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농업경영체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도에 경영회생자금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동 지원제도의 상설화 및 지원대상·지원범위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농업경영회생제도의 도입 및 보완

2004.3.5일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농업경영회생제도를 도입하여 농가부채문제를 상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상설화 하였으며, 건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일정 규모이상의 농업인에 대한 경영회생자금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였다.

우선, 200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00억원을 연리 4%,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했던 자금지원 조건을 2004년도는 2,000억원을 연리 3%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조건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건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농규모의 2분의 1이상의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인 농업인 중에서 경영평가결과 경영회생이 가능한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농업인의 경영회생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조합에 「농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대상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전심사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각 급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평가방법은 농업인의 지원신청서와 사전심사결과를 토대로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관계자, 농신보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재무상태, 경영능력, 기술수준 및 자구계획의 현실성 및 영농의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정밀경영평가결과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에게는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회생불능 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업용 시설 등을 인수하는 농업인에게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용시설의 방치를 방지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종묘대, 비료대, 사료대 등 경제사업의 농업용 연체채무, 농경지, 농업용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2001년 1월 8일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자금 및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등을 지원범위로 하도록 확대하여 자금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반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토록 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체 컨설팅지원사업'과 연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조기에 경영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2004년 3월 1일부터 대출금리가 4%인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기계구입자금의 신규대출금리를 4%에서 3%로 1%p인하하였다. 또한 3월 5일부터는 농업인이 대출받은 2년 초과 농업정책자금 중 2003년도 말 잔액에 대한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1.5%로 인하하였다.

전 사업에 대해서 신규대출금리를 일시에 인하할 경우,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 재정운용계획 등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구입자금과 같이

농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과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과 같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다.

이와같이 일부 신규자금의 대출금리 및 기존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것은 농업경영여건이 여전히 호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예상되는 농가소득 감소와 차입금에 의존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고,

- 농가/도시근로자소득 : (1990) 97.4% → (2000) 80.6 → (2001) 75.9 → (2002) 73.0
→ (2003) 76.2

1997년 이후 시중은행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추세를 보여 왔으나, 농업정책금리는 계속 4% 수준에 고정되어 있어 정책금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도 시중금리의 동향, 국가재정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5)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추진

1998년 이후 대형산불의 빈번한 발생으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어 임업인의 경영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임업분야에 산림재해공제 도입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보험개발원 등을 통하여 정책보험으로서의 산림재해공제의 제도화 가능성 분석 및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조합, 학계, 임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산림재해공제도도입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도입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보험성립의 필수요건인 피해율 및 입목표준 금액 산정 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산림재해공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밤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밤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6) 어가경영안정대책 추진

우리나라의 수산업 경영여건은 한·중·일 어업협정의 체결·발효와 어업자원의 감소, 수산물 수입 개방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고비용·저생산성이 심화되어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연근해 및 원양어업 경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도에 영어자금 1조 4,050억원, 원양어업경영자금 3,000억원 등 1조 7,050억원을 공급하였고, 대출금리는 7월 1일부터 1%P 인하하여 연4.0~4.5%로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영어자금 1조 4,050억원과 원양어업경영자금 2,590억원 등 1조 6,640억원을, 2004년도에는 영어자금 1조 4,050억원, 원양어업경영자금 2,070억원 등 1조 6,120억원을 연4.0~4.5%에서 1~1.5%P 인하하여 3월 1일부터 연3.0%로 공급하고 있다.

2002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은 2001년 1월 8일 제정·시행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2001년말까지 지원기로 된 것을 2002년 8월말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하였고, 7월 1일부터는 영어자금과 원양어업경영자금을 제외한 33개 수산정책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하여 어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었다.

2003년도에 2차례에 걸쳐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이미 지원받은 중장기 정책자금(2001~2003년 사이 상환기간 도래)과 연대보증피해어업인

지원특별자금의 금리를 3월 1일부터 연5%에서 연3%로 인하·적용하고, 5월 27일에는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 상환에서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장하였다.

2004년도에는 3월 5일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시행하여 2003년말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아 사용 중인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에 대해 기존 대출기간과 금리에 불구하고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연1.5%로 인하하는 한편, 2001년 어가부채경감대책으로 이미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과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대출금리를 연6.5%에서 연3.0%로 3.5%p 인하·적용하고 연대보증피해어업인지원 특별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2000년 이후 신규 대출받아 2003년말 현재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어업용 상호금융대출금 3,500억원에 대해 연5% 5년 후 일시 상환조건으로 대체하고, 태·폭풍 등 자연재해, 적조 및 어·패류 질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수산업경영체에 대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 200억원을 연3%,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2004년 어가부채경감대책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지 않고 당초 상환기일에 중장기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어업인에 대해 그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이자의 40%를 환급해 주며, 각종 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받은 대출금을 대출 당시의 약정기일 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해 주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지속적 하락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의 대출금리를 7월 1일 연5.5%에서 연4.5%로 인하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합법적인 어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어업질서확립자금의 대출금리도 8월 13일 연4.0%에서 연3.0%로 각각 1.0%p 인하·적용하고 있다.

(7)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도입

(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도입·시행

해상에서의 어선원 및 어선은 자연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시 체계적인 재해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어선원보험은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원화되어 운영되었으나,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으로 일원화하여 어선원의 복지증진 및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발생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어선보험은 어선의 선체, 기관, 의장품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 금액과 손실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추진

양식업은 양식기술의 안정화 및 대형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풍·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4년도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입법을 추진하여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8.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가. 추진배경

농가소득이 10년간 등락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주작목인 쌀 재배에 의한 소득 및 1인당 쌀 소비량 마저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존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 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단위 : 만원)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농가소득	2,031	2,180	2,329	2,348	2,049	2,232	2,307	2,390	2,447
10a당 쌀 소득	49	54	67	70	67	73	76	77	69

생산위주의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농정시스템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한 지역에 대한 다양한 농림지원사업을 수요자 요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나. 특화사업단 추진현황

농촌진흥청에서는 경기(5), 강원(4), 충북(3), 충남(4), 전북(3), 전남(5), 경북(4), 경남(5), 제주(2)로 구성된 35개 특화사업단을 2004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현재의 사업단은 역할이 생산부문의 문제해결에 집중되어 있고, 외부전문가 참여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사업단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방향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산·학·관 네트워크 활동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대내외적인 농업의 위기극복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19조 투융자의 효율성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기대효과를 얻고자 한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되는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이 클러스터라는 형태로 조직화 되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로 이는 계획활동과 지원활동이 각각 지역과 중앙으로 역할 분담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의 혁신역량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산·학·연·관의 각 구성주체들의 긴밀하게 네트워크화된 상호협력체계가 지역농업클러스터 성공의 관건이 된다. 각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클러스터 유형은 대상지역, 주도적 혁신주체 및 특성화 정도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 정도에 따른 분류로는 생산·유통주도형 클러스터, 가공주도형 클러스터, 테마주도형 클러스터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방 농정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며, 지역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여 농업발전을 주도 할 것이다. 또한 지역, 품목특성, 주도세력 등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는 기본방향에 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보면 농림부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을 총괄하며, 농

촌진흥청은 R&D부분에 대해 총괄지원하고 지자체는 클러스터 형성 및 육성을 총괄할 것이다. 지자체 중심의 시·군 또는 도단위에서 구성될 사업단의 형태는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사업은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성공가능성과 자발적 노력을 최우선 조건으로 혁신활동 및 공동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클러스터 핵심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2005년도 시범사업은 10개소의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국고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당 10~30억원 정도의 규모로 차등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이다.

사업선정의 기본원칙은 자발성·다양성·혁신성·응집성·대표성이다. 즉, 주도세력이 확실하게 포함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허용하고, 지역농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품목·품목군·농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설정할 것이다. 산·학·관·연의 네트워크를 형성되고 클러스터 중심으로 협조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산업 대책 추진135
2. 채소·원예산업141
3. 축산업146
4. 임업160
5. 수산업180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산업 대책 추진

최근 우리나라의 쌀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 국내외 가격차 확대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쌀을 자급하게 되었고, 특히 1996년 이후에는 6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다. 이러한 생산의 증가 외에도 UR협상 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매년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물량의 외국산쌀을 의무적으로 수입 하고 있다.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난 1995년 457만석이던 재고는 2001년 927만석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선 1,005만석 이었다.

정부는 수급균형회복을 위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대북지원과 주정용 공급 등 재고특별처리를 추진한 결과 2004년말 재고는 710만석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평년작 수준만 생산되어도 매년 250만석 이상의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공급과잉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조정 등을 통한 적정재배면적 유지, 쌀소비 확대를 위한 대 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재고미 특별처리도 추진하여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DDA협상/쌀협상 결과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개방 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개방폭 확대에도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화, 소득안정장치 확충, 수매제도 개편 및 민간유통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쌀산업종합대책을 2004.2월에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농가 소득안정과 경쟁력 있는 쌀산업 기반 구축이다. 2010년까지 6ha 수준의 전업농 7만호육성을 위해 현재 2~5ha수준 전업농들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한편, 고령·영세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방식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둘째 쌀값 하락시에도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 등 쌀관련 직접지불제의 확대·개편이다. 논농업직불제는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개방폭 확대에 따른 소득감소의 일정수준을 보전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개편한다. 아울러 현재 친환경 인증 농가 중심인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저투입농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WTO출범이후 보조금 감축에 따른 수매물량감소로 농가소득지지 등 본래의 기능이 약화된 추곡수매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보조금감축에 따른 수매량 감소를 보완하고 적정한 재고유지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비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넷째 민간유통 활성화와 품질고급화이다. 미국종합처리장(RPC)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전문가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RPC를 민간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가 우리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같은 대책은 관계전문가·농업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세부추진방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가. 쌀 농가 소득보전 방안

쌀 협상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규모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고령농의 경영이 양후 생계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63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하는 경우 경영이양직불금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대금과 함께 직불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유동화된 농지는 젊고 유능한 2~5ha 농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영농규모화 사업을 두배로 늘리고, 이자율 등 지급 조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있는 6ha 수준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이들이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쌀관련 직불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반농법과 친환경농법과의 소득차이분을 지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WTO협정에 따라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정형 생산중립직불제(decoupled income support)로 전환하고 지난 2002년도 도입된 이후 쌀값 안정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연속가입자에 대하여는 납부금을 경감하는 한편, 쌀값 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농업의 친환경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친환경농업의 외부효과 제고를 위해 지구단위 개념의 저투입농법까지 확대하고 있다.

나. 추곡수매제도 개편

WTO 출범이후 보조금 감축에 따라 추곡수매는 수매물량이 매년 감소되어 본래의 농가소득지지와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향후 시장개방 폭 확대시에는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WTO에서 허용보조로 분류되고 있는 시가로 매입·방출하고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공비축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4.8월 현재의 수매량과 수매가격 결정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근거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여론수렴과 현재 진행중인 중앙·지역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부안을 마련한 후 2004년 11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정부는 공공비축 규모, 매입·방출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안을 마련하고 수급균형 회복시기와 DDA협상/쌀재협상 등을 감안하여 농민·농민단체, 관계전문가 등 각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 함으로써 벼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미질을 향상시켜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시작한 후 2003년말까지 총 8,101억원을 투자하여 쌀 주산지에 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DSC : Dry and Storage Center) 568개소를 설치하였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2002년부터 신규 RP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SC)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의 DSC 지원조건을 2004년부터 용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여 생산자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RPC 부실 경영이 지속될 경우, RPC의 벼 매입능력 저하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 및 농가의 벼 판매 어려움 등 쌀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 평가, 후 지원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경영평가(2004년 2~4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우수 RPC 및 구조조정 RPC를 우선적으로 지원,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가와 계약재배 매입품종을 3개 품종 이내로 일괄 예시하는 등 고품질 쌀생산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여 RPC의 수확기 벼 매입능력을 높여 민간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촉진

DDA협상/쌀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고품질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쌀의 품질고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1년부터 정부는 그동안의 증산위주의 정책을 품질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 확대, 질소질 비료 사용감축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생산·유통 전반에 걸쳐 고품질쌀 생산·유통체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의 개발 및 고품질 보급종 종자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재배과정에서의 비료·농약의 사용감축은 물론 재배관리도 표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PC 중심의 고품질화를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산물벼 처리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부족한 건조·저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중 유통되는 포장양곡에 산지·품종·도정일자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시중유통 쌀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과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마. 쌀소비 촉진 전개

쌀소비촉진 홍보사업은 2001년까지 연이은 풍작으로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미래의 쌀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와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쌀중심 전통식단을 권장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쌀소비촉진 홍보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20~30대 젊은 주부를 주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소비 촉진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성 홍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공익광고인 러브미 홍보사업은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유명 축구선수와 방송 아나운서, 문화계의 대표적인 장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TV-CF 공익광고를 제작·방송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한 러브미광고로 젊은층과 주부들에게 우리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러브미 로고가 국가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러브미 홍보가 2002년 정부업무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대한민국 광고윤리대상 우수상, 일간스포츠 광고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쌀소비촉진 캠페인은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등 단기 홍보대책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시중유통 브랜드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대하고 브랜드쌀에 대한 품질향상을 촉진시켰다.

2003년에 처음 실시한 브랜드쌀 평가는 쌀의 인지도,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시·도에서 51개 브랜드를 추천받아 주요미질 구성요소인 품위·품종혼합율·식미 등의 품질과 소비자패널에 의한 소비자만족도를 평가하여 12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평가는 브랜드쌀의 관리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 3회 실시함으로써 시중유통쌀에 대한 연중 평가 체계를 확립하였다.

쌀소비촉진 프로모션 이벤트로 러브미 가족체험캠프를 개최하였는데, 농촌현장 쌀 체험캠프는 5~13세 어린이를 둔 가족 400명을 대상으로 전국 3개권역에서 2박3일간 실시하였으며 러브미 강좌, 러브미 밥짓기, 쌀퀴즈, 농촌체험 및 러브미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지역단위로 특색있는 쌀소비 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체 홍보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MBC 추석특집·SBS 특집방송·KBS UN쌀의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등 TV를 통한 방송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밖에도 전문가단체에 의해 한국인의 식미와 건강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쌀 시장개방에 대응, 우리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의 우리쌀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소비촉진 홍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채소·원예산업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지역별 생산기술이나 경영능력이 높은 우수농가를 발굴, 자료를 축적하여 일반 농가들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배·시설채소·꽃 등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유

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추·마늘·양파 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1) 채 소

(가) 노지채소

고랭지채소·고추·마늘 등 품목별로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비가림 시설·관수시설·이식기·종합처리장·공동육묘장 등 주산단지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유통·가공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수급불안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소수급안정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먼저 사전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관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본농가수 10,700호, 모니터 1,2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측내용을 언론매체와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관측정보 분산 방식도 다양화 하고, 농가의 판로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안정사업 자금 운영규모를 5,550억원으로 확대 조정하여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최저보장가격제도 실시 대상품목도 2000년 10개 품목에서 2003년부터 13개 품목으로 늘리고 가격산정기준도 기존의 경영비에 자가노력비의 일정비율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에서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최저보장가격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나) 시설채소

1990년대 초반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에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38백만불에 불과하던 채소류 수출이 2003년 106백만 불로 증가하였다.

기 지원된 시설원에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시설원에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순회 지도로 시설원에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10여종의 온실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해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수출물류비 및 수출 구매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시설채소류의 생산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01년부터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 채소에 대해서도 수급안정제도를 도입한 후 2002년에는 토마토, 풋고추를 추가하는 등 연차적으로 대상품목과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04년도 자금규모는 1,972 억원이다.

(2) 과 수

1994~1999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하여 동일 과종 재배면적 2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관배수 시설, 고성능 방제기,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키낮은 밀식사과원조성 등 생산기반시설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등 산지유통 시설 기반확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그동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던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

금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경영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제를 개선하였다.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과실판매촉진사업 지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판매촉진행사의 확대로 해외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과 대만의 WTO가입에 따른 수입규제 완화로 2002년 신선과실류 수출이 전년보다 85% 증가한 5,938만\$(38.5천톤)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수출협의회를 통한 수출업체 애로해소 등 수출확대 기조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과수산업은 1990년대 후반까지 총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과잉생산, 소비감소 등으로 정체 내지 감소세로 반전하고 있으며, 과수농가 247천호 중 전업농 수준인 1.5ha이상 농가는 7.3%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겸업농으로 호당 평균 0.7ha의 영세한 영농규모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과수는 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이나 농가간 재배기술 수준의 편차가 커서 품질에 따른 가격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가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산과실의 소비는 과채류 등과의 소비대체로 정체상태인 반면 과실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과 한·칠레 FTA, DDA 등 개방에 대비하여 과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적 영농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농업인이 고품질 생산을 주도하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 및 자율수급조절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7년간 조성될 FTA기금 1조 2천억원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및 조직에 집중지원하고 고품질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핵심 생산자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품목별 조직화가 촉진되도록 개별농가 단위의 분산지원 보다는 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현방안은 첫째,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문농협 육성과 품목연합회 활성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게 추진하고,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시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의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배치계획에 따라 거점산지유통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동마케팅 등 유통조직화를 통하여 현대화된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실현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품목조직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체계 정착을 위해 품목조직 자율의 유통협약과 명령제를 적극 지원하고, 자조금과 유통활성화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소비촉진 및 출하조절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안전 생산을 뒷받침할 시설 및 기술을 보급한다.

품질로써 경쟁이 가능하도록 키낮은 사과원, 포도 비가림, 참다래 방풍시설, 관배수시설 등 품목별 핵심 고품질 생산시설에 중점지원하고, 품질보증 우량규격묘목의 생산 및 유통체계가 정착되도록 묘포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정보 등 다양한 관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품목별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할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를 상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인 수출체계를 정착시킨다.

전문 수출단지 49개소의 생산과 출하 기반을 정비하고 물량보다 품질위주의 고가 전략으로 수출국 주류시장을 개척하며, 광양 및 마산의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완공을 계기로 수출품 규격화를 촉진하고, 수출물류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최적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선도농을 육성한다.

한·칠레 FTA발효로 관세가 철폐될 시설포도·복숭아·키위 재배농가중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폐업을 지원하고,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적정재배면적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규모화를 위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선도농가에는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재배보험을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화 회

일관 생산·선별·수송·수출이 가능하도록 집단화된 화회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생산·출하 등을 자율 조절토록 유도하고 있다.

대도시 법정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규격출하품 포장재 지원 등 규격출하를 확대하고 화회공판장에 유통정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 확대 등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고품질 품종개발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축 산 업

가. 한우산업

한우번식기반을 확충하고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3년말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후 하락한 산지소값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1)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여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120천농가, 553천두가 가입하여 전체 가입암소 사육두수의 약 90%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제주도 등의 지역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하고자 2002년부터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까지 43개소의 생산기지를 조성하였고, 2004년에는 36개 대상자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수입쇠고기와의 품질차별화를 위하여 혈통등록, 도체정보수집 등 한우 개량자원 확대와 효율적인 개량정보의 수집·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초음파 단층촬영 기술”, “유전자 분석기술” 등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의 거세확대를 통한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해 2000년 지원한 거세장려금(20만원/두)은 2003년 6월까지만 지급하고 2004년 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여 1등급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거세우를 대상으로 20~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규모화·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축협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를 브랜드축산물 생산·유통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소규모 사육농가는 브랜드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과 통일된 사양관리프로그램으로 고품질의 균일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통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3) 산지소값 안정대책

2003.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 이후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감소가 이어지면서 500kg 큰 수소값이 2004.5월에 280만원 수준까지 떨어지짐에 따라 산지 소값 안정화를 위해 쇠고기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및 소비촉진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농협중앙회 및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와 함께 전국적인 한우고기 특별할인판매행사와 시식회를 추진하는 한편, 쇠고기 구분 및 부위별 요리방법 등을 게재한 교육·홍보물 제작, 114 전화번호 안내이용 광고 및 TV 인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우고기의 안전성과 맛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나. 낙농산업

우유 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요에 맞는 생산감축 유도와 소비촉진 활동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1) 사육여건 및 사양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성 증가

생산비가 1998년 500원/kg에서 2003년 457원/kg으로 0.9% 줄어들었으며, 사양관리 개선과 젖소개량 등을 통해 2003년 두당 산유량이 7,732kg으로 전년에 비해 9.3% 증가하였다.

앞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우유수급안정 추진

2002년부터 우유 생산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낙농진흥회는 2002년 11월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낙농가의 자율적인 생

산감축을 유도하였으나, 절반수준의 농가가 증산하는 등 효과가 미흡하였으며 원유 수급조절자금으로 1,387억원을 투입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수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낙농진흥회는 매년 30만톤의 잉여량이 발생하여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유 소비는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유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유생산을 감축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03년 3월부터 낙농가대표들과 4개월여 동안 14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원유생산 감축대책에 합의(2003.7.9)하여 7월 16일부터 동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금년에는 일반유업체와 낙농진흥회의 생산조절제 시행 및 검은콩 우유 등 신제품의 판매증가 효과로 11월 중순 분유재고량은 4.2천톤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낙농진흥회 잉여량은 2003년 1월 817톤/일이던 것이 금년 1~10월 기간중에는 326톤/일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원유수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

또한, 우유소비 확대를 통해 잉여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V·라디오 공익광고 실시, 114 안내시간을 활용한 우유 우수성 홍보, 교과서 집필관계자 현장체험, 틈새시장 확보를 위한 소규모 유가공 기술 교육 등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한 우유소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 양돈산업

양돈산업의 구조적인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비선택호부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으로 제한되었던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1)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돼지 사육두수는 2004년 9월 현재 905만두로 작년동기 929만두에 비해 2.6% 감소

하였으며, 양돈농가 수는 전년동기의 15천농가보다 14% 감소한 13천농가로 규모화가 더욱 확대되었다. 산지가격은 지난 5년간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3~9월)와 비수기(10~12월)로 구분되어 가격의 등락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4년은 미국의 광우병 및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대체수요 증가 및 돼지 호흡기질병(PMWS) 발생으로 인한 사육두수가 감소로 인해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2004년 1월부터 양돈농가가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거출하여 TV·라디오 광고, 요리축제,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 돼지고기 비선호부위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 돼지고기 수출 추진

2000년에 이어 2002년에도 구제역 및 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중단되었던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제주도산에 한해 2004년 5월부터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삼겹살·목살을 제외한 등심·안심·후지 등 국내 비선호부위의 수출이 확대되어 수출입 불균형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돈농가에서는 PSE돈육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열처리 가공육의 수출을 위해 일본과의 위생조건 체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 양계산업

2004년 9월 양계 3만수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1,300호로 전체 사육농가 14만호 대비 1.0% 수준이나 사육두수 점유율은 71%로 다른 축종에 비해 기업화·규모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1) 닭고기 수출입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강화

2003년도 닭고기 소비량은 38만톤으로 이중 수입량이 8만9천톤으로 자급율은 76% 수준이었으며, 1997년 7월 1일에 냉동닭고기의 경우 관세 30.5%로 수입개방된 이후 매년 관세 감축과 함께 수입물량이 증가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미국, 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입규제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3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닭고기는 2003년도에 산란노계육, 삼계탕 등을 일본·홍콩·대만·중국 등으로 1,921톤 수출하였으나, 2003년말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영향으로 금년 8월까지 279톤을 수출하였다.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조건을 충족 후 일본지역의 닭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우수바이어 초청, 일본식품박람회 참가 및 할인판매행사 등 홍보 사업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2) 양계산업 안정대책 추진

생산자단체, 소비자, 농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율의 가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양계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지속 홍보하여 육계가격을 안정시키고 있으며 또한, 2.5kg이상의 대형닭 생산 유도를 위하여 축산연구소의 농가보급으로 환기 및 급이시설 등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양계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경영개선 등 컨설팅지도 업무를 농협 컨설팅지원실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닭고기 등급제를 점차 확대하여 4개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다.

근본적으로 육계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원종계 수입물량을 국내 수요와 연계시키도록 원종계 수입업체간 자율적인 합의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마.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1)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활성화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낙후된 축산물 유통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육류유통체계로 발전시키고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였다.

2002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9개소를 완공하여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하여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고품질 육류를 공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이후 대일 수출중단으로 수익률이 저하되었으며, 일반도축장보다 유지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도에는 LPC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금리인하(5% → 4%), 건설자금 상환기간 연장(5년거치 10년상환 → 7년거치 10년상환)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였다. 향후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유통 확립을 위해 HACCP 미적용 도축장에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2005년부터 도축장에 대한 HACCP 운영수준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LPC 등 시설이 우수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도축장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 식육판매점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소매유통구조 개선

LPC, 브랜드업체,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직판장 및 가맹점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식육점을 위한 시설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육점을 정예화·현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3)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및 사업확대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를 2003년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2004년도는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2년차로 당초 수수료단가(소 1,600원/두, 돼지 300원/두, 계란 0.5원/개)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DDA/FTA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양축농가의 여건을 감안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재정자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닭고기 등급제와 축산물 부분육 등급표시 사업은 단계적으로 소·돼지·계란과 같이 등급판정 수수료를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조사료 급여비율을 2004년까지 6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1)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신규 초지조성이 어려우므로 기성초지를 보완하거나 답리작, 사료포 등 사료작물 재배에 중점지원하고, 총체보리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남는 논·밭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용수원 개발, 목로개설 등 조사료 생산성 증진을 위한 기반을 개선하였다.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벼짚의 암모니아 처리 및 생벼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으로 벼짚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조사료 생산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이용기술교육으로 농가의 조사료 생산·이용효율 확대 등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부존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등

축산농가가 농산 부산물 및 곡물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가배합사료시설(분쇄기 및 배합기) 구입비를 2001년 48농가에 17억원, 2002년 32농가에 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하는 섬유질사료제조시설에도 2001년 2개소 7억원, 2002년 5개소에 14억원을 지원하는 등 부존사료자원의 이용 증대를 도모하였다. 2003년에도 섬유질사료제조시설 등 사료제조시설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분뇨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에 가축분뇨의 액비화·퇴비화 등 자원화시설과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2년말 설치대상농가의 97.6%가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2003년에는 1,904개소에 394억원의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을 지원하였다.

(2) 축산분뇨처리 표준설계도 제작 보급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종류가 다양해 농가의 선택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1998년까지 축종별·규모별로 가축분뇨 적정처리모델 30개를 설정하였으며, 1999년에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8종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축산분뇨시설의 건설한 시공과 더불어 축산 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촉진해 나가고 있다. 2002년에는 표준설계도를 CD(2,500set)로 제작하여 지자체·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하여 활용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친환경축산 등 여건변화에 맞게 환경친화형 축사의 표준설계도를 설정·보급할 계획이다.

(3)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확대지원

경종농가의 축산퇴비·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조 설치를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분뇨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는 액비저장조 설치를 확대(2003 : 680기 → 2004 : 800기)하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축분비료유통센터」 5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료공정규격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축산분뇨의 품질을 강화하여 축산과 경종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연순환형 축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유기축산시범사업 실시

안전한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을 유기축산시범사업목장으로 지정(사업기간 2003~2005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축종별 유기축산 관련기술 개발 및 세부사양 관리지침서를 마련함과 아울러 유기축산의 경제성 분석 및 적정 사육모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5)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경비 및 기술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량 기준 설정, 작물별·계절별로 축분퇴비·액비의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체계의 강화

(1) 축산물 위생수준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축산물에 대한 단계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가축사육단계에서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도축장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의 전면시행과 더불어 축산물 가공장·보관장·판매장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SSOP(자체위생관리기준)·HACCP 적용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병원성미생물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공단계에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위생적인 축산물가공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보관·판매단계에서도 Cold chain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위해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통중인 위해축산물에 대해 회수제도(Recall system)를 도입하는 등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구제역 방역은 매년 재발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관계부처와의 공조체제하에 범정부적 차원의 국경 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공·항만 X-ray 검색,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휴대육류 집중검색·검역탐지견 배치강화 및 미신고자 범칙금 처분, 해외 여행객 신발소독, 수입건초 및 나포·피항어선 소독, 외국인 농업연수생 등 관리,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하였으며, 국내 방역은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구제역 예찰 모니터링 검사, 지역 예찰담당관 지정,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방역교육 강화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별대책기간 이후에도 『평시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구제역은 200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돼지콜레라는 2001년 12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 선언이후 5개월만인 강원도 철원군에서 2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2002년 10월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다시 발생한 것을 시발로 하여 2002년 12월 21일까지 인천 강화·서구, 경기 김포·이천 등 4개 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3월20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여 10월까지 7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총 72건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점을 감안하여 돼지콜레라를 조기차단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전국적인 예방접종 실시로 동 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2004년 10월말까지 총 6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함으로써 동물성 원료를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위험축군에 대한 광우병 집중검사 및 검사물량을 확대(2003년 1,046건 → 2004년 2,200건) 해 나가는 한편,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내년부터 도축되는 소 전두수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머리·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4년 3월 20일 경기 양주를 마지막으로 7개 시·도 10개 시·군에서 총 19건(닭10, 오리 9)이 발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모든 발생지역에 대한 위험지역(3km) 및 경계지역(3~10km)을 설정하여 동 지역내의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 및 살처분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민·관·군 합동으로 추진하였고 2004년 5월 29일 경남 양산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든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어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었다.

정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시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의 가축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가축방역대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질병별 시기별 발생 양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방역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루셀라, 광우병 등을 중점관리하고 입국자 소독,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등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국경검역, 국내방역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우선 2005년 말까지 가축사육업의 등록완료,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 신·증축 역

제 의무 부여 등 특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등 가축방역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검역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폭주 등으로 현장방역인력이 현저히 부족해짐에 따라 시·도, 시·군 등 일선 방역인력을 확충(232명)해 나가고, 방역현장에서 절대 부족한 수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방역복무를 대체해 주는 「공익수의관제」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자.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에 따라 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개념의 도입이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계서도 2004년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이 가장 중요하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동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최근 조사에서 한우가 비싸도 믿을 수 있다면 구입하겠다는 소비자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는 추세이다. 또한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들로부터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강력히 도입을 요구해 왔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 주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EU, 일본)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 기본방침 수립 및 시범사업 참여브랜드 선정

동 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4년 1월에 전문가 중심 T/F를 구성하고, 일본 현지조사(2월)와 함께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5년 5월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에 시달하였다.

시범사업 참여브랜드 선정은 시·도로부터 23개 브랜드를 추천받아 T/F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안성마춤한우, 양평개군한우, 횡성한우, 섬진강뜨레한우, 장수한우, 대관령한우, 팔공상강우, 남해화전한우, 하동솔잎한우 등 9개 우수브랜드를 7월에 선정 발표하였다. 우수브랜드를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농가의 기록관리 및 자율 신고의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 초년도에 기초를 닦기 위한 조치이며, 단계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2) 전산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2004년 6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유관기관(단체) 전산실무자 회의를 거쳐 조달청에 장비 구입 및 S/W개발을 의뢰하였으며, 8월에 동양시스템(주)을 개발업체로 선정하고 프로그램개발에 착수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은 2005년 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생산단계 입력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도축·가공단계 프로그램, 2005년 1월까지 판매단계 및 소비자 검색서비스 제공, DNA 동일성검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05년 2월부터는 모든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3) DNA 동일성검사 준비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소가 도축되어 판매될 때 동일한 소로부터 생산된 쇠고기인지 여부를 DNA 검사를 통하여 사후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경력직 전문가 3명을 8월에 채용하여 10월말까지 축산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실험실 등 시설공사

와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2005년 1월까지 시험가동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2월부터는 시범사업에 본격 적용하게 된다.

(4) 시범사업 착수

10월 1일부터 안성마춤한우 등 9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생산단계에서 귀표부착 및 전산입력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차를 두고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우선 1단계로 농가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소의 이력과 향후 생산 및 이동사항(전·출입, 폐사)을 전산 입력하고, 2단계는 12월부터 도축이후 가공장·판매장에 이르기까지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전달되도록 조치하며, 3단계는 내년 2월부터 판매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게시하고 판매기록하고,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한 사후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시범사업에 모든 시스템이 본격 적용된다. 시범사업은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문제점을 도출·보완해나가되 '08년까지는 법령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여 전면 실시에 대비한다.

시범사업 출범과 함께 10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 주소는 「www.mtrace.net」와 「최고기이력.com」으로 하여 정보 입력 및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추진은 축산물등급판정소(총괄 및 유통단계)와 농협중앙회(생산단계)가 공동 주관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다.

4. 임 업

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

(1)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2001년도까지는 묘목생산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범위가 지정묘목 생산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도의 간이온실시설, 관정시설과 2003년도의 묘포지 토양개량사

업 등 양묘장 시설비 및 2004년도의 트랙터 등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양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묘기술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우량묘목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각 도에서 우량종자를 직접 채취하여 묘목생산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종자저온저장시설을 2004년부터 각 도에 시설하고 있다.

<우량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계획 및 실적>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이후	비고
관 정	78개	20	20	22	10	6	
간이온실	80동	16	14	17	9	24	
토양개량	341ha	-	96	98	62	85	
장비구입	47조	-	-	10	10	27	
종자저온 저장시설	8동	-	-	1	1	6	

※ 2004년까지 지원금액(국비) : 3,035백만원

특히, 검증된 산림용 종자사용으로 형질우량목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의 신규조성 확대함과 동시에 우량활엽수 종자확보를 위하여 OECD에서 정하는 채종림 구비조건(OECD/CFRM)에 맞는 채종림을 확대 지정하여 정부에서 채취한 종자를 묘목생산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종자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또한 원산지가 증명된 종자를 검사 후 사용토록 하고, 생산된 묘목은 엄격한 검사를 통하여 불량묘목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국제규범에 맞는 종자 및 묘목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2)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山地)와 도시·마을 등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 추진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나라 건설을 목표로 경제림 14천ha 및 생활권 주변에 5천ha의 큰나무, 경관조림 등 다양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

름다운 마을숲 조성 18개 마을, 대나무바이오숲 1개소 등 전통 마을숲 복원 등 특색 있는 향토 경관 숲 조성사업을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성하고 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용재·소득수종 조림과 생활권 공익조림을 추진하면서 대면적 단일 수종의 획일적 조림방법을 지양하고 조림 대상지의 지형, 토질, 지세 등을 고려한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 조성 and 조림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수 조림, 활엽수 밀식조림, 용기묘 조림, 파종조림, 경관조림, 수원함양조림, 금강소나무 육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 아까시꽃 개화 저조로 꿀 생산량이 전년도의 7%정도에 불과하여 양봉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 2005년부터 다양한 밀원수종의 조림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시·도 관계관 회의 및 계획을 수립 시달하였다.

(3) 경제림 단지 육성

우리 산림은 그동안 녹화는 성공하였으나 조림역사가 짧아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65%를 차지하는 청년기의 산림으로 한창 가꾸어 주어야 할 시기로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산림자원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불량임지에 대한 수종갱신과 우량 천연림 등을 보육하여 2030년까지 인공림 240만ha를 조성하는 한편 우량활엽수림, 소나무, 참나무 등 천연림 110만ha에 대한 숲 가꾸기를 실시하여 전체 산림의 55% 수준인 350만ha의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 동안 이를 위해 임업진흥권역과 과거 대단위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총 1,221개 단지에 2,451,366ha의 산림을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대상 지역으로 조사하였으며, 경제림 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육성단지의 집단화 및 구획의 정확도 검증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리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가 확정되면 시·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단지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산림사업의 내용을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므로써 경제림 육성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림 대상지 조사결과>

구 분	계	국 유 림	민 유 림
단 지 수	1,221개소	105개소	1,116개소
면 적	2,451,366ha	563,955ha	1,887,411ha

(4)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내(1998~2003)에 추진한 숲가꾸기사업은 총 1,688천ha로 계획(1,560천ha) 대비 108%를 실행하여 2030년까지 350만ha의 경제림 육성을 위한 육림 계획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5년간(2004~2008년) 총 100만ha의 산림을 가꾸어 줄 계획이다.

2002년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고 2003년부터는 정책육림사업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기능별 목적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능별·경영목적별로 숲가꾸기 방법을 차별화하여 투자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나무·참나무를 우리나라 대표 수종으로 육성해 나가며 간벌제 등의 수집비 지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의 맑은 물 공급기능과 수자원 확대를 위한 「5대강유역 수원함양림 종합관리계획」 추진과 댐유역 산림을 녹색댐으로 조성 수질·수량 개선을 통하여 토사유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인공댐과 녹색댐의 기능을 상호 보완해 나가고 있다.

숲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숲으로 개선하고, 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외부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설계·감리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함은 물론 숲가꾸기기술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법령 및 제도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강화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 체제 구축

200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43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건조일수(81일)대비 산불발생건수가 5.3건으로 예년평균 6.7건 보다 21%가 감소하였으며,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는 1,561ha로 예년의 6,356ha에 비해 75%가 감소하였다.

건조한 기후가 증가하고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산불피해가 예년에 비해 적었던 것은 일선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예방노력과 함께 초동진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화장비 및 인력의 확충과 산불방지협정제도를 통한 자원의 활용도 증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도 봄철(1.1~5.15) 산불상황>

구 분	5년평균(A)	2003년(B)	2004년(C)	증감(C/A)
산불발생(건)	449	221	433	96%
피해면적(ha)	6,324	114.5	1,548	24%
건당피해면적(ha)	14.1	0.5	3.6	26%
건조일수	67	61	81	121%
건조일수대비 산불(건)	6.7	3.6	5.3	79%

금년 산불조심기간에는 민간인을 채용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확충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산불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3개 분야의 비예산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논밭두렁 등 취약요인 사전제거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을 추진하였으며, 진화자원의 확충과 산불진화헬기의 주·야간 상시 정비체제 시행으로 가동률을 증진시켜 진화능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2004년말 현재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총 244천ha로서, 2003년말 발생면적 254ha보다 약 10천ha가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전체 산림면적 6,416천ha의 약 4%에 해당되는 산림이 각종 산림병해충에 시달리고 있어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는 주요지역을 나무주사, 위생간벌, 천적방사 등을 통하여 피해면적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향후 4~5년 후면 완전 방제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부산지역에서 1988년 최초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은 남부지역은 물론 최근에는 제주, 포항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 피해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홍보함은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방제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타 돌발해충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신규발생 하는 돌발해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피해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3)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산지 모암의 대부분 풍화침식이 쉬운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지의 경사가 급하며, 연평균 강수량 약 1,300~1,500mm의 60%가 여름 장마철인 6~9월에 내리는 자연조건과 전쟁에 의한 피해와 남벌, 화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195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산림면적의 10%인 68만ha가 황폐되었다. 이러한 황폐산지를 복구하여 치산녹화가 성공하게 된 이면에는 사방사업이 있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1945년 해방이후 2003년까지의 사방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다.

<사방사업 실적(1945~2003)>

산지사방	예방사방	해안사방	해안침식지복구	야계사방	사방댐
727,183ha	441ha	3,748ha	28km	4,325km	1,346개소

한편 최근에는 엘니뇨(el-nino)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도 빈발하고 있어 산사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근래의 사방사업 시공은 재해방지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주요계곡과 경사면 등에 사방댐 및 야계사방 등 예방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사태가 하류의 농경지와 주택, 도로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175개소, 야계사방 70km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산림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다단계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재해예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범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도에 추진할 사방사업의 종류별 물량은 다음 표와 같다.

<2004년 사방사업계획>

산지사방	예방사방	해안침식지복구	야계사방	사 방 댐	산림유역관리
103ha	25ha	5km	70km	175개소	3개소

※ 산불피해지사방복구 포함

아울러 2005년 완료목표로 올해부터 추진 중인 “GIS를 이용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산사태위험지를 과학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산사태위험예보 발령 및 사방댐 등 사방사업시행 예정지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4)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21세기는 흔히들 생물다양성 보전시대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와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진 세계 각국은 지금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즉,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자원을 얼마만큼 실용성 있게 개발하고 활용하는가 등 지속가능한 이용의 영속성을 유지하느냐의 여부가 곧 국가경쟁력의 평가로 이어지는 시대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산, 구릉지대, 깊은 계곡 등 복잡한 지형·지세와 4계절이 뚜렷한 기후대 등 자생식물의 생육조건이 다양하여 온대지역 국가 중 상대적으로 식물종이 풍부한 국가이다. 우리나라 식물자원 현황은 고등식물이 5,285종, 하등식물 3,609종으로 전체 식물자원은 8,894종이며, 고등식물 5,285종 중에서 목본·초본 등 관속식물이 4,594종, 선태류 등이 691종이며, 규조류, 편모조류, 담수녹조류, 운조류, 해조류 등으로 구성된 하등식물이 3,609종이다.

산림청은 21세기 생물자원확보 경쟁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 제정(2001. 3. 28)하고 이어서 식물종 다양성의 수집·보존·이용기반 구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등 수목원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수목원의 확충 및 육성 등에 관한 국가차원의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동 계획은 향후 5년간(2004~2008) 정부의 수목원 정책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수목원의 확충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며, 시·도지사와 국립수목원장은 본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수목원 본래의 기능 및 국민의 여가선용과 자연학습 공간으로서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새로운 수목원 문화의 창달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확보·이용과 자원화를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목원 현황(2003현재)>

구 분	합 계	국 립	공 립	사 립	학 교
개소수(개)	32	1	12	14	5
비 율(%)	100	3	38	44	15

또한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전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산림사료에 대한 학술연구의 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국·공립 수목원내에 산림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 산림박물관 건립 : (2002) 6개소 → (2003) 8개소 → (2008) 11개소

그리고 지구상에 식물종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과 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생물종 다양성의 보존, 식물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업 추진,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전략 수립 등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생태숲 조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생태숲 조성 : (2002) 6개소 → (2003) 9개소 → (2011) 16개소

그 밖에도 생물자원에 대한 탐색·수집·이용 및 산업화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전통적인 고유경관을 회복하고 우리식물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민적인 관심제고 및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자생식물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꽃길조성 등 자생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생식물 식재사업 추진 현황(16개 시·도)>

구 분	합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사 업 량(km)	308	32	50	55	61	55	55
투자액(백만원)	21,999	2,286	3,572	3,928	4,357	3,928	3,928

(5) 5대강유역 산림 특별관리로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우리나라는 연간 수자원총량 1,267억톤 가운데 65%인 823억톤이 산림에서 공급되는 산원수(山源水)이며, 비 산림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은 35%인 444억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림에서 발원되는 하천수는 산림상태 여하에 따라 양과 질이 좌우됨으로 다량의 맑은 물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의 녹색댐 기능제고는 대단히 중요하다.

대면적의 산림유역 상류부는 활엽수 천연림이 분포하고, 중·하류부는 침엽수 인공림으로 분포되어 있어 상류부는 장벌기(長伐期) 사업을 통해 산림토양의 저류기능을 증진시키고, 하류부의 침엽수 인공림에 대해서는 가지치기와 간벌 등 집약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산림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수질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단계별·연차별로 적극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5대강유역 수원함양산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2단계(2000~2007)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한강, 낙동강 등 5대강 유역과 동강(강원 영월) 유역의 수원함양림을 대상으로 2,600ha의 조림과 30,162ha의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하였다.

앞으로 5대강유역에는 활엽수 위주의 수원함양조림사업과 침엽수림에 대한 간벌,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3년도 5대강유역 수원함양림 산림사업 실적>

구 분	단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 조 립	ha	2,600	877	356	529	205	633
○ 육 립	ha	30,162	13,738	3,863	3,217	3,901	5,443
○ 사 방							
- 산 지	ha	28	5	16	5	-	2
- 야 계	km	24	4	5	8	2	5
- 사방댐	개소	32	9	1	6	5	11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2003년말 현재 국유림대부·사용허가·분수림설정 현황은 14,446건 100,193m²으로 그 허가 및 사후관리는 다음 기준에 의거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산림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대부용도의 광업·골프장·스키장 등의 사업부지와 도서지역 등 산림생태 및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대부를 억제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부지는 매년 그 이용실태를 조사 목적의 사용 또는 부실 관리지는 과감히 취소하거나 기간연장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편 자연친화적이면서도 농림어업인 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대부용도의 약초·산채·버섯재배 등에 대하여는 대부조건을 다소 완화하였다.

조림대부지(분수림설정 포함) 면적 80,290ha 중 경제사회적 여건 악화로 방치되고 있는 조림대부지내 사유입목을 년차적으로(2003년 10,458ha → 2004년 계획 8,700ha) 매수 또는 회수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국가가 직접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 강구

(1)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조림·육림·임목생산 등 산림 작업을 기계화하고 원목 등 각종 임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지역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도밀도가 높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내 입목 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도까지 총 사업비 794,01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2003년도말 현재 임도 총 시설거리는 15,510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ha당 임도밀도는 2.4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인 일본 5m/ha, 미국 10m/ha, 독일 40m/ha에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부족한 임도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임도밀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품질” 유지보다는 “수량” 확대에 치중한 결과 장마철 집중호우시 일부 임도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경사면이 노출됨으로써 경관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과거 예산단비에 맞추어 설계·시공하던 것을 1999년부터 산림상태, 토양특성 등 현지 산림여건에 따라 피해방지·경관유지 가능한 공종을 반영하여 설계·시공토록 하는 등 견실한 임도를 구축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임도시설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km)

구 분	1968 ~1996	1997 ~ 2002	2003	누 계
계	10,803	4,553	154	15,510
국 유 임 도	3,296	689	12	3,997
민 유 임 도	7,507	3,864	142	11,513

구 분	1968 ~ 1996	1997 ~ 2002	2003	누 계
누 계	10,803	15,356	15,510	15,510
밀도(m/ha)	1.69	2.39	2.42	2.42

또한, 기존 임도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임도에 대하여는 대대적인 구조 개량사업을 전개하여 미비사항을 보강함으로써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2002년부터 당분간 신설은 최대한 줄이고, 구조개량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신설사업비의 70%이상을 구조개량사업비로 전환하여 보강이 시급한 임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량해 왔으며 임도구조개량사업은 2006년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한편,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임도 노선선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임도는 장기계획에 관한 법령 근거가 없이 매년 임도노선을 선정하여 시행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산림법령을 개정하여 “간선임도설치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임도노선 선정기준” 및 “임도의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 법제화하였다.

또한, 현재 임도를 설치할 때 총 사업비의 10%를 산주가 부담토록 되어있어 산주가 임도설치를 기피함으로써 임도설치에 애로가 많아 영세 산주지원 차원에서 지방비로 확보 지원하는 한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개정하는 등 임도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자연에 조화롭고 견고한 임도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

(2) 임업기계화 촉진

임업기계화는 임업노동인력 부족 및 산림 사업시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지형에 맞도록 기계·장비를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기계톱, 예블기 등 수요가 많고 저렴한 장비는 자체 개발 또는 기존 보급장비의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적용이 가능한 타워야더 등 외국의 고성능 임업기계를 선별하여 시범

사업용으로 도입하여 적용시험을 거쳐 실용성 있는 기종은 벤치마킹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산주 등에 고가의 기계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전국에 10개소의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능인영립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1995년에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까지 512개단 5,969명을 조직(국유림 135단 1,695명, 민유림 377단 4,274명)하였으며 장기적으로 2007년까지 850개단 10,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1997년에는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기능인영립단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에는 기능인영립단 조직과 관련된 자격기준, 교육기간, 훈련기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능인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산림사업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능인영립단을 계속하여 확대 육성할 계획이며, 연중 작업물량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산재보험 등 직업정착을 위한 생계보장 및 후생복지 대책을 강구하여 임업기능인의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4) 다양한 단기소득원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2003년말 단기임산물 생산액은 1조 7,081억원으로서, 임산물 총생산액 3조 1,083억원의 55%를 차지하는바 임업의 장기성(40~60년)을 보완하고 산주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자원화와 산림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기소득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소득 품목인 밤·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고 매년 80백만\$

정도를 수출하는 밤의 경우는 우수품종 개발 보급, 노령목 갱신,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 밤생산장비 지원, 작업로 개설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소득원으로 개발,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략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2003년도까지 60개의 특화품목 단지를 주산단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주산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집단화·규모화 유도 및 저장·가공·유통시설을 주산단지와 연계 시설하여 주산단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산림복합경영사업지 9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04년도에는 30개소에 대한 산림복합경영사업비를 확대 지원 중에 있다.

아울러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 및 임산물 가공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 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경수, 분재, 자생란 등 산림관상자원과 최근 청정임산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채류 및 산약초·약용수종,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는 수액 등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재·야생화·자생란 등 우리 자생식물 관상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식물자원 수요·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박람회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밤, 표고, 산채류 등 청정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임가를 중심으로 친

환경생산 이력제도입, 친환경토양개량 등 기반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 임산물의 지역특산품 유도 및 생산자별 고유 브랜드화 추진 등 임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5)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 조성

우리나라 산림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 산림의 65%를 점유하고 있어 아직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로 국내 목재소요량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무는 간벌·소경재가 대부분으로 재질 및 제재수율이 수입 대경재에 비하여 낮고 국산재의 특성인 휨, 뒤틀림 등으로 인하여 이용 활성화에 애로가 있으나, 목재 자급을 향상과 국산재 사용으로 인한 산주 소득증대 등을 도모코자 정부에서는 1993년도부터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3년말까지 7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산주 소득증대 향상과 국산재 활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산재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에 국산재를 이용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요청하고 있고, 올해에 별채제도 및 산업용 국산목재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국산재 이용촉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폐목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02년부터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을 실시하여 2003년도까지 5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폐목재를 원료로 이용하는 보드류산업 육성을 통해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을 마련코자 보드류시설 현대화도 199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정부는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산재의 신수요 개발, 국산재·폐목재를 이용한 건축자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현재에는 「폐목질자원의 재활용 기술 및 시스템 개발」, 「국산재의 건축부재 이용」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라. 살기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 지역으로 육성

국토면적의 45.9%, 산림면적의 58.5%를 차지하는 산촌은 농림업의 생산기반이며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핵심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촌은 그동안 국토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었으며,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이농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인구 과소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1995년부터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현재까지 93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45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끝나는 2007년까지 총 193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1980년대에 들어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산업화의 심화 등으로 급증하는 야외 휴양수요를 산림으로 흡수하기 위해 1989년부터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1991년에 815천명에 불과하던 전국 휴양림 이용자 수가 최근 2003년도에는 4,345천명으로 무려 5배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될 경우 산림휴양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청에서는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도 현재 운영중인 92개소와 조성중인 14개소를 포함하여 2007년까지 140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휴양공간을 체험·교육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자연학습 및 산림체험코스 시설의 설치를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산림휴양서비스를 내실화해 산림휴양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노력하고 있다.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산림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도에 휴양문화계를 산림문화과로, 2004년도에는 산림휴양과로 확대 개편하여 휴양·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림휴양공간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산림교육과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진흥을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녹색학교 운영(10천명/년), 푸른 숲 선도원 선발육성(36천명/년)하고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개최, 초·중등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그린캠프 개최,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산림환경연수를 실시(200명/년)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숲 해설가를 배치(132명/년)하여 숲과 산림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과 나무, 자연을 주제로 한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등을 개최하였고, 제3회 산의 날 기념식과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임업인과 산악인이 하나가 되어 자긍심을 높였으며, 그 밖에도 소년소녀가장 산림생태기행, KBS 열린음악회, 오리엔티어링대회, 산악스키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림문화 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마라톤, 산악스키 등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는 호연지기를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송이축제, 뗏목축제, 소나무축제, 통나무축제 등 유무형의 산림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산림문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2001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 연간 1회 이상 등산을 한다는 사람이 75%나 되고, 연간 10회 이상 산에 간다는 사람도 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산로는 좁은 국토에서 보다 효율적인 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므로 쾌적한 등산 환경의 조성과 등산로 훼손 방지와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전국의 등산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등산로를 복구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관리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등산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를 국가 탐방로로 지정하여 전국 등산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등산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정표, 안내판, 나무표찰, 해설판 등의 표준화 등 등산로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1)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2004년 7월 package 합의를 통하여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 기본 골격에 대한 WTO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져, 세부 지침을 위한 후속 협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임산물 분야는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업협상에서, 목재류는 비농산물협상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수출·입국간, 선·개도국간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대체로 선진국 입장은 높은 수준의 관세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개도국은 개도국에 대한 배려와 관세감축에 있어서 신축성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의 확보와 관세감축에 있어 점진적 접근방식을 주장하였고, 비농산물협상에서는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임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 진행될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임업인의 공감대에 기반한 협상을 추진하고, 대내적으로 관계부처간, 대외적으로 일

본, 대만 등 공조국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임업계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다.

(2) 해외조림 확대

장기·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을 실시하여 국내 목재수요의 50%를 충당 할 계획으로 1993년부터 해외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호주, 뉴질랜드, 파라과이 등 7개국에 8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98천ha를 조림하였다.

그동안, 해외조림 확대를 위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비를 2003년까지 487억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2000년부터는 해외조림목의 수확이 시작되어 펄프용 칩 89천BDT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앞으로도, 장기 국내 목재수요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탄소배출권 등과 연계한 에너지다소비 및 목재다수요 업체의 사업 참여를 도모하고 해외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의 다양화와 함께 사업의 내실화에 충실을 기하여 해외조림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3) 산림자원 보유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목재수급안정은 국가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 목재 자원이 성숙되지 않아 목재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주요 산림자원 보유국인 호주, 인니 등 7개 국가와 양자간 임업협력약정을 체결하여 목재수급안정과 해외진출업체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 5월 17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3차 한·몽골 임업협력회의에서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세랭계주, 남고비주의 조림 사업 참여 확대와 산림병해충방지, 동북아산불네트워크에 몽골 참여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향후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4년 9월 10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얀마 임업협력회의에서는 미얀마 중부지역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고(2004~2005, 330ha, 30만\$),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목재기업에 대한 경영활동 지원, 미얀마내 임산업 투자증진, 목재가공분야 전문가 교류 증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4년 12월 대전에서 개최될 제3차 한·베트남 임업협력회의에선 베트남의 황폐지 복구 조림에 우리나라 기업, 민간단체의 참여와, 기 진출한 우리나라 해외조림업체의 활동 지원, 상호 전문가 교류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분야 국제논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엔산림포럼(UNFF)은 세계 산림에 대해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괄하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산불, 병해충 등 현안까지 다루는 논의의 장으로 협약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몬트리올 프로세스는 온·한대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지역협의체로서 7개 기준과 하위 67개 지표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한 국제열대목재기구(ITTO)는 1994년 채택된 현 협정체제가 2006년 완료됨에 따라 후속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추가 재정 확보에 대해 열대대소비국과 생산국간의 견해 차가 커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5. 수산업

가. 연근해어업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업은 최근들어 어업자원의 감소, 주변국가의 EEZ선포, 해양오염 심화 등 주변의 어업환경 변화와 IMF의 영향으로 인한 어업경비의 증가로 대부분 어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업환경 변화에 맞도록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는 등 개혁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사업을 국정 100대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안어업은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역실정과 어업자원 수준에 맞게 허가정수 조정 등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근해어업은 EEZ확정시 영향이 크거나 어업경쟁력이 저하된 대형선망, 대형트롤, 대형기저(외끌이·쌍끌이),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채낚기, 근해 안강망, 근해자망 등 8개 업종 위주로 우선 감척해 나가고 또한 경쟁력이 열위인 업종에 대하여도 감척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별도로 유사업종 통폐합 등 어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자율관리 어업정착 등 어업자원관리를 강화하여 연근해 어업자원을 보전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99년 9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영향받는 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동 협정과 관련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하여 1999~2002년까지 총 1,328척을 감척하였으며, 한·일, 한·중 어업협정 관련 영향이 없는 어선은 “일반감척사업”으로 1994~2004년까지 근해안강망 등 1,227척을 감척하였다.

2004년도 일반감척 사업으로 연안어선 33척과 근해어선 77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또한,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EEZ 체제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2002. 12월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을 실현해 나감은 물론,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식량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동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2003년도에는 근해어업 조업구역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이 참가하는 자율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 대한 오랜 분쟁을 자율적 합의를 통해 해소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유사한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및 어구·어법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어업 관리를 실현하고, 어업인 편의도모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 주변수역 자원보호 및 관리강화

UN해양법 발효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의 EEZ선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EEZ수역에서 어업자원을 능동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관한 법률」을 제정, 199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수역의 어업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자원전문가 협의회 구성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2004년까지 5,912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166천ha를 시설하였고, 2004년도에 502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9천ha를 시설중에 있으며,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2003년까지 90여종의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19개국·도립 배양장에서 연간 7억마리를 생산하여 분양 및 방류하고 있으며,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2003년까지 550백만마리를 방류하였다. 2004년도에도 국·도립 배양장에서 6억마리를 생산하여 분양 및 방류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1억6천만마리를 연안바다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나갈 계획이다.

UN해양법협약에 따라 EEZ체제에 맞는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어업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종묘 방류, 바다목장화 등 어업자원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키

는 불법어업이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3년 5월 범정부 차원의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확고한 불법어업근절의지 표명을 위하여 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3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였고, 불법어업 다발해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해양경찰청·지자체 등 합동으로 매월 2회의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육상에서도 불법어선 신규진입 차단을 위하여 전국 FRP선박 조선소 167개소 및 소형 항포구를 대상으로 불법어선 건조행위를 집중 감시하였으며, 불법어획물 유통현장 및 불법어구 적재 어선에 대한 항포구 육상단속도 병행 추진하였다.

그리고 불법어업자의 합법어업으로 전업 유도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어업질서확립 자금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및 불법어업 현장 신고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 200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어업인들의 동참 노력에 힘입어 소형기선저인망어선도 총 3,220척중 1,000여척이 감소하여 2,000여척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어선의 출어일수 감소에 따른 어업소득 감소와 선원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단체에서는 생계수단임을 이유로 전업을 기피하면서 불법어업의 묵인 내지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집단 반발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2004년도에도 법무부·검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법무부(검찰)와 협조하여 불법어업자에 대하여 강력한 사법처벌을 하는 한편, 불법어업의 벌칙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해양경찰의 불법어업단속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지도선과의 상시 공조 단속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경함정 1척과 국가지도선 2척을 선단편성 운영과 수산업

협동조합의 수산물 거래질서확립 기능강화를 위하여 일선 67개 수협이 '범칙어획물 판정협의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법 어획물로 의심되는 어획물에 대해서는 위판금지 및 고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어업인 의식제고 및 불법어업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원보전 의식 확산,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어업질서확립자금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을 추가 지정하여 어업질서확립에 민간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어선을 근원적으로 정리하는 폐업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종사어선으로서 선주가 희망하는 경우 잔존선가 지급후 어선을 폐기·정리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친환경어선대체 및 장비설비개량

2003년에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영세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소형 노후어선, 기관대체 및 어선장비·설비개량 등에 61억원을 지원하여, 16~21년 이상의 노후어선 422톤(95척)을 대체 건조하고 연료과다 소모형 저효율 기관 7,566마력(41대)과 노후된 어선 24척의 장비·설비를 개량하였으며, 어선용기계 등에 474대를 대당 200만원한도 내에서 국고로 지원하였다.

2004년도에도 영세어업인의 노후어선의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노후어선의 친환경어선대체 553톤(41억원)을, 기관대체 7천마력(9억원), 장비·설비개량 10척(4억원), 어선용기계 공급 등 250대(4억원)를 지원중이다.

나. 해면양식어업

2003년도에는 김, 미역등 안정생산을 요하는 품목이나 재해상습지역에 대한 어장

개발의 금지와 관리가 부실한 어장의 재개발 금지 조치로 양식어업의 경영안정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기르는어업육성법」을 제정 시행(2003. 7. 15)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식어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김양식시설의 규모현실화 및 굴양식의 수하연 줄수등을 규정, 밀식에 의한 과잉생산 방지와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04. 1. 31)하여 양식시설시기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다.

양식기반시설 확충분야에 약 128억원을 투자하여 어패류 종묘배양장 7개소, 개량부자 28만개 및 내과성 가두리 등을 시설토록 지원하여 양식산업의 하부구조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해면양식장 개발에 약 75억원을 투입, 변화되는 시장여건을 감안 고부가가치 중심의 패류어장 110ha 개발 등과 마을어장의 패류살포양식장 447ha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영세어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다.

양식장의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조성중인 양식단지조성사업에 30억원을 투자, 계속사업인 대형단지 2개소 등은 정상 추진중이나, 최근의 양식업계의 경영악화에 따라 일부 용자사업 및 단지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산 활어 수입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특별영어자금 115억원, 중간종묘매입방류 160톤(7억원) 등 총 12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종묘방류사업 확대를 위해 불교계(원로협의회)의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양식어장정화 부문에 총 312억원을 투입, 부산 등 10개 시도의 양식어장 20천ha 청소, 전남 도암만, 경남 진해만, 강진만 등 특별관리어장 8천ha를 정화하였다.

양식재해예방을 위해 2003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최고밀도, 최대범위로 발생한 유해성 적조방제를 위하여 민·관·군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총력대응으로 적조피해를 1995년 대비 28% 수준(215억원)으로 최소화하였으며, 재해피해복구를 위한 총 2,125억원을 양식시설 및 생계비 지원

등에 투입(태풍 등 자연재해분야 1,980억원, 한파 등 어업재해분야 145억원)하여 피해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2004년도에는 양식장 개발,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공급, 배합사료직불제, 마을어장개발에 총 10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양식어장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2004년 7월부터 어류양식 신규개발을 금지중이며, 2004. 7월부터는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된 김·어류양식어장을 동일품종으로 재개발시 기존 면적의 5~20%를 축소 개발하도록 하였다.

120억원을 지원, 고효율 저오염 배합사료 개발 등을 통하여 생사료 공급관행을 배합사료 위주의 공급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양식질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질병 D/B구축, 이동병원 등 어병방역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수산질병관리사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3단계 수산질병 관리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 내수면양식어업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원 개발과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부응한 환경친화적인 양어장 시설을 위하여 첨단양식장, 담수어 양어장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24억원(11개소)을 지원한데 이어 2004년도에도 24억원(11개소)을 확보하여 토산어종은 물론 고부가가치 어종인 뱀장어 등을 양식할 수 있는 집약생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라. 원양어업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조치로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연안국 EEZ내 어획쿼타 감축,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양정책자금을 2004년에 3,220억원(영어자금 1,150, 해외자원생산자금 2,070)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간 어업협정을 통해 양자간 어업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연안국들과는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주요 수산자원을 보유한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나미비아 등과도 새로운 어업협정 또는 수산협력약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해외어장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연안국가를 대상으로 현지투자·협작 등 상호 호혜적 입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통한 새로운 어장개발을 추진하여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주요 국제수산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는 물론 어업규제 움직임에도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원양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척사업을 추진하여, 1998~1999년도에는 북해도 트롤어선 6척, 2000년~2003년에는 콩치 봉수망 10척을 감척 완료하였으며, 오징어채낚기어선은 2002년~2003년 기간중 5척을 감척하였으며 2004년에는 포클랜드어장의 조업부진을 계기로 2004~2013기간중 계획되어 있던 감척물량 20척을 전량 감척 추진중이다.

또한 참치어업의 고부가가치 제고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후 참치어선을 연차적으로 신조대체할 계획이며, 2004년에 2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시책

1. 기초생활환경 개선191
2. 교육여건 개선202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204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205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 추진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은 1970년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 정주권 개발 및 문화마을조성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농촌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제활동의 축소는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축소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쇠퇴와 인구의 감소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서비스산업의 쇠퇴를 가져오며 지역인구 유출로 인해 다시 지역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1980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43%인 1,600만명이었으나, 1990년 26%로 줄어들고 2000년에는 20.3%인 938만명으로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1980년 1,083만명에서 2000년에는 403만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읍·면지역 인구 추이(1980~200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전 국 (A)	37,436,315	43,410,899	46,136,101
동 부	21,434,116	32,308,970	36,755,144
읍·면 부 (B)	16,002,199	11,101,929	9,380,957
구 성 비 율(B/A)	42.7	25.6	20.3

자료 :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최근에는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던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이 더욱 약화되어, 시장 경제규모를

상실한 면소재지 상권의 퇴조와 함께 주거는 농촌의 마을에서, 생활의 편리함은 인근 도시에서 향유하는 생활 패턴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소득향상, 주5일근무제 도입, 국민관광형태의 변화 등의 대외적 여건변화로 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도시근교지역은 전원주거단지개발, 농촌관광진흥, 체험활동의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수요증가 등 농촌과 농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농촌현실 속에 기존의 식량증산과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농촌지역개발은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쾌적한 전원주거공간, 농업체험공간, 국토보전공간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농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농촌지역의 다원적기능에 따른 개발수요를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살고 싶고 찾고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권이 같은 3~5개의 농촌마을을 권역단위로 묶어 농촌의 다원적 기능확충, 특성화 개발 및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 영농권 등이 동일한 마을을 권역단위로 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시부터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면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특성에 맞게 개발유형을 설정하여 종합개발하는 상향식 지역개발방식을 지향하며,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1,000개 권역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도 사업대상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민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예비계획 검토, 현지조사, 사업계획설명회 등을 거쳐 2004년도 사업착수대상지 16개 권역과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20개 권역을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

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및 위탁방식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사회 각분야의 저명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기초 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역개발 주체역량 제고를 위한 주민대표 합동 워크숍과 사업권역별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다양한 형태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사업권역별 '농촌마을개발협의회'와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방향 점검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갈 리더와 지역전문가 등 지역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마을지도자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살고싶고 찾고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의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농촌이 되도록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자원을 격조있고 특성있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파트너쉽(partnership)을 견지하면서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전국 1,217개면 중 오지·도서면을 제외한 755개 면 및 1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농어촌지역내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주민편익·복지시설과 주택을 정비하고, 면지역내의 중심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기존 마을 정비는 물론 택지를 조성하여 마을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의 문화 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까지 전국 770개 면 및 자치구에 대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제1단계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면당 1개소 수준의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199개소의 선진화된 농어촌마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마을 정비는 면당 3~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45억원(보조 30, 융자 15),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지구당 3년 내외의 사업기간 동안 30~50억원(보조 20~30, 융자 10~20)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문화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3년까지 지방양여금의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권개발사업은 전국 770개면(구)중 618개면에 대한 1단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문화마을조성사업은 156개마을을 조성하여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2004년에는 총 2,626억원(지방양여금 2,346, 국고융자 280)을 투융자하여 152개 면에 대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44개 지구를 추진하여 21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신·개축 및 개량 등 1,177동의 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마을의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연계 설치할 계획이다.

그간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주택용지 조성 후 분양에 따른 입주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외지인의 유입 등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용지조성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조성 등 메뉴를 다양화 하고,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도 농촌에 함께 정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다양한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개발·보급

주택개량시 건축설계에 소요되는 설계비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4년도부터 2001년까지 44종의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였으며, 2003~2004년 기간중 변화된 농촌주거생활을 반영하고 아름다운 농촌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촌경관주택 표준모델 6종을 추가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의 농업환경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으로서의 농촌경관 어메니티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농촌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농촌주택 표준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주민이 주택건축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율은 2002년말 31.1% 수준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며, 특히 면단위 이하 산재된 자연마을은 상수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대부분 우물·하천 등 자연수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지역의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대상인구	급수인구	보 급 율(%)	
전 국		48,518천명	43,021	88.7	
도시	대도시(광역)	23,061	22,713	98.6	97.9
	중소도시(시)	15,835	15,355	97.0	
농촌	읍부지역	4,003	3,208	80.1	51.5
	면부지역	5,618	1,746	31.1	

자료 : 환경부 상수도 통계(2002)

이에 따라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시에 농업용수와 농산물세척용수까지 병행하여 공급하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 2003년에 480개소 816억원을 지원, 2003까지 4,311개소를 완공함으로써 962천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4년에는 748억원을 투자하여 440개소를 개발하여 제1단계(1994~2004)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2003년도 행정조사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농촌지역의 소규모 자연마을(20~30호 수준)에서는 아직도 불안정한 자가우물이나 자연수에 의존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도 행정조사 결과 3천여개 마을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필요

이에 따라 제2단계(2005~2014)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이후에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소규모 자연마을(20~30호)을 대상으로 3천개소를 2014년까지 개발하여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생활용수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구 분	추진목표	2003까지	2004계획	2005이후
사업량(개소)	7,751	4,311	440	3,000
사업비(억원)	12,951	7,103	748	5,100

마.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 육성

행정자치부에서는 읍지역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10년간 전국 194개 소도읍에 총 12조원(국비 2조, 지방비 2조, 타부처 국비와 민자 8조)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원년인 2003년에는 인천 강화읍 등 14개읍에 962억원(국비 300억, 지방비 453억, 민자등 206억)을, 2004년도에는 울산 온양읍 등 22개읍에 1,110억(국비 600억, 지방비 410억)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한 바와 같이 매년 20개 소도읍에 대한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2천억원의 국비지원이 10년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비 지원방식이나 규모로 보아 당초 계획된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바.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향후 6조원 투자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1975년부터 연평균 13,700여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까지 총 3조 7,246억원을 투자하여 371천동의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개량하였고, 2004년도에도 1,800억원을 지원하여 9,000동의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04년 10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농어촌불량주택은 205천동으로, 앞으로 건축비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동당 3천만씩 융자지원을 할 경우 6조원정도 재원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원별 연도별 농어촌주택개량 투자현황>

(단위 : 동, 백만원)

년도	사업량	사업비	용 자 지 원					보조지원 지방비
			소 계	재 특	주택기금	지방비	농 협	
계	370,950	3,761,289	3,724,584	124,728	2,083,794	1,027,952	488,110	36,705
1976	4,254	3,190	2,552	-	-	2,552	-	638
1977	15,238	10,289	7,251	-	-	7,251	-	3038
1978	50,000	88,000	83,000	16,600	20,750	16,600	29,050	5000
1979	35,000	100,857	96,857	24,214	19,371	24,214	29,058	4000
1980	20,000	86,105	83,520	20,880	16,704	20,880	25,056	2585
1981	10,210	58,326	57,457	14,364	11,491	14,364	17,238	869
1982	3,118	20,771	19,794	4,949	3,959	4,949	5,937	977
1983	5,087	36,822	34,957	5,244	10,487	8,739	10,487	1,865
1984	5,110	38,746	34,899	5,234	10,470	8,725	10,470	3,847
1985	7,062	52,220	48,689	5,210	26,438	7,303	9,738	3,531
1986	5,069	38,510	34,866	5,230	17,433	5,230	6,973	3,644
1987	5,052	38,055	35,056	5,258	17,529	5,258	7,011	2,999
1988	6,052	43,729	42,042	6,306	21,022	6,306	8,408	1,687
1989	5,746	40,911	40,027	5,244	24,896	5,244	4,643	884
1990	5,677	50,025	49,960	5,995	29,976	5,995	7,994	65
1991	10,112	100,903	99,933	-	59,959	19,987	19,987	970
1992	10,493	141,481	141,399	-	105,060	21,351	14,988	82
1993	11,764	159,665	159,665	-	105,099	34,600	19,966	24
1994	16,164	240,000	240,000	-	160,000	59,000	21,000	-
1995	25,000	400,000	400,000	-	240,000	120,000	40,000	-
1996	25,000	400,000	400,000	-	240,000	120,000	40,000	-
1997	25,000	400,000	400,000	-	240,000	120,000	40,000	-
1998	19,845	346,400	346,400	-	203,950	118,444	24,006	-
1999	10,200	204,000	204,000	-	142,800	40,800	20,400	-
2000	7,750	155,000	155,000	-	77,600	53,700	23,700	-
2001	8,500	170,000	170,000	-	112,000	45,000	13,000	-
2002	9,200	184,000	184,000	-	112,000	54,000	18,000	-
2003	9,500	190,000	190,000	-	112,000	57,000	21,000	-

사.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추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의 후생복지등을 위하여 1994년 7월~2004년 6월말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농어촌지역에 투자되는 농어촌특별세 15조원중 1조2천억원을 농어촌도로에 투자하게 되었으며, 농어업의 삶의질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까지 3조6천억원으로 상향지원 될 전망이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지역의 교통해소는 물론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직접 이용되는 도로로서 그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추진 결과 농어촌특별세 1조1,523억원을 포함한 4조28억원을 투자하였음에도 2003년12월말기준 지방도, 군도 등 상위도로의 평균 포장률은 46.3%인데 비해 농어촌도로포장률이 28.4%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주재원인 양여금법이 폐지(2004.1.29)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농어촌도로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며,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도로사업에 한해 2005~2008까지만 연간 8,500억원을 지원하기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한바 있으나, 전체 지방도로사업예산의 17.0%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기정 사실 임으로 현재 28% 포장률을 지방도, 군도 등 상위도로 수준인 약 40% 수준까지 올리려면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1994~2014)>

구 분	계	2004 까지	5개년(2005~2009) 투자계획					2010~ 2014	
			소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비 (억원)	36,000	13,196	12,000	2,400	2,400	2,400	2,400	2,400	10,804
사업량 (km)	4,678	2,724	1,150	230	230	230	230	230	804

※ 농어촌특별세 재원에 대한 사업량 임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197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주택의 노후화와 공폐가의 증가, 오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농촌환경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농촌의 고유한 생태적, 문화적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경쟁우위요소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세식 화장실 방류수로 이용되는 수자원의 낭비·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자연순환 방법을 이용한 친환경화장실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218개소를 보급하였다. 이 화장실의 특성은 병원성의 균의 완전사멸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가 없으며,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 없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며 퇴비화와 액비로 활용함으로써 수질오염방비, 수자원절약, 분뇨처리장 건설 및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비닐하우스 단지 내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농작업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농촌의 어메니티 가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촌공간계획 기법에 의한 환경을 계획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활가능성, 에너지 절약, 전통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개발 기술(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1~2004)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농촌다운 친환경 농촌주거모델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서 5마을 25농가에 보급하였다.

자.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

상수원 오염과 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도 도시지역 주민과 같이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1994~2014)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면지역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2003년까지 총 7,103억원을 투자하여 4,311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2004년도에는 748억원을 투자하여 440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14년까지 12,951억원을 투자하여 총 7,751여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3년까지 총 4,447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16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는 총 1,121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30개소를 포함한 83개소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14년까지 총 23,000억원을 투자하여 515개소 사업을 추진,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75%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차.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 사업

농산어촌의 기초마을 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를 초기단계에서 처리하여 상수원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1991~2003년까지 1,912개 마을에 4,211억원을 지원하여 하수관로 부설 및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였고, 2004년에도 744억원을 지원하여 180개 마을에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2014년까지 하수 시설이 불량한 2,048개 마을에 1조238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반대 등으로 광역매립지 조성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을 연계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1995~2014)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7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총 3,020억원을 투자하여 83개 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6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소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를 BOD 30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91개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바 있고, 2004년에는 27억원을 투자하여 5개소(시설개선 포함)를 추진중이며, 공공수역이 수질보전 및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상수원 및 하천주변에 밀집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991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1997년부터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4,260억원(지방비포함)을 투자하여 39개소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2003년에는 28개소(신규13개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처리률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낮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소·인 제거설치, 공법개선,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 등 시설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2. 교육여건 개선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의 고등학생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은 2003년 현재 입학정원의 3%로, 대상범위는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생 및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지역이 된 학생에게도 특별전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1996~2004년까지 등록자 : 126,880명
- 2005학년도 선발예정자 : 19,368명(일반대 10,993명, 전문대 8,375명)
- 341개 대학 : 일반대 187개교, 전문대 154개교

나. 농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

(1)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0년도에 도입된 농업인자녀학자

금지원 사업은 2000년까지는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 자녀 중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편모 농업인의 인문계고교생 자녀에 대하여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편부 농업인의 인문계고교생 자녀까지 포함한데 이어, 2003년도에는 인문계 고교생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총 6,287억원(1,527천명)을 지원 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경지소유규모 15,000㎡미만 농업인의 모든 고교생 자녀 87천명에게 6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해 설치된 자영농과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1986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173억원(30천명)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15억원(2,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새마을장학금 지원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후 영농에 종사할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1979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77억원(61천명)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3,000명에게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4년도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지원계획>

구 분	고교생 학자금	자영농과생 급식비	새마을장학금
인 원	87천명	2,600명	3,000명
금 액	646억원	15억원	7억원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용자해 주고 있으며, 1994년부터 농특세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2003년까지는 학기당 200만원, 2004년도에는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상환은 졸업 후 1년 거치, 융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균등상환 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까지 2,037억원(174천명)을 지원 하였으며, 2004년 11월 현재 26천명에 대해 600억원을 지원하였다.

라.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농어촌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각종 문화 및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토록 하여 농어촌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적 욕구 충족 및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1995~2003년까지 57개관(275억원)을 건립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장서구입비 지원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1995~2003년까지 86억원을 지원하였다.

2004년도에는 14개 도서관에 평균 8억원씩 112억원의 건립비와 도서 구입비로 198개관에 총 8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건립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도서구입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 시행 성과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제도는 2004년 10월말 현재 농어촌지역 가입자수는 199만명(농어업인 36, 비농어업인 163만명)으로 정착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1995년부터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 부터는 지원액을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이상(8,800~17,600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12	221	293	271	399	502	606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례노령연금 및 유족·장애연금 등의 연금수급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제도 및 선납·분기납제도 등 납부편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연금제도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들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액 경감연령을 2000년부터 종전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건강검진 실시 및 급여기간 연장

농업인 등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험급여 확대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세대주 및 40세 이상인 세대원에 대하여 1995년부터 당뇨·고혈압·간기능 장애 등 성인병에 대해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보험급여기간을 1998년 300일에서 1999년 330일로 연장하였고,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급여일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나, 하루에도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쇼핑행위”와 남수진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와 지나친 약물투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진료질서를 확립하고자 급여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고 당뇨, 고혈압 등 질환의 경우에는 365일 제한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를 2002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3)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율을 22%로 확대(중전 :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WTO-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우선 2004년도에는 보험료 경감율을 30%까지 확대하였으며, 2005년에는 40%, 2006년에는 50%를 목표로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 재해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2002년까지 505개소에 대하여 3,102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3년도에는 100개소에 316억원(교부세 포함)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는 330억원(교부금 포함)을 확보하여 172개소에 지원하였다.

(2)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 확대

1981년부터 농어촌,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1,899여개의 보건진료소 설치 및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여 경미한 수준의 진료와 가정방문보건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수단 및 의료시설 등이 미흡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확대

1998년 공중보건한의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1년까지 128명의 한방공중 보건의사를 배치·운영하였으며, 병역법 개정(2000.12.26)으로 한의사면허 소지만으로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가능함에 따라 2002년에 274명, 2003년에 387명으로 대폭 증원되었으며 2004년에는 30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신규로 편입되어 총 95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의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